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세계로!

# 2020 노동운동포럼

2020년 9월 26일 13:00~17:35



# 목차

---

<b>강연</b>	[강연] 코로나19 이후, 어떤 세계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2
	[발제] 코로나 위기, 체제에 도전하는 노동운동의 과제	26
	[토론1] 김금철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41
<b>토론</b>	[토론2]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45
	[토론3] 이원재   금속노조 기획실장	50
	[토론4]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57

---

# 코로나19 이후, 어떤 세계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 1. 들어가며

포스트-코로나 사회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진다. 시민들이 체제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차갑게 얼어버린 실물 경제와 달리 스스로 뜨겁게 달궈진 주식시장, 이 와중에도 국민을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는 포퓰리즘 정치인들,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에도 도리어 커지는 국가 간 분쟁. 우리는 시장과 정치가 동시에 실패하는 역사적 과정을 이렇게 경험하는 중이다.

본 글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와 이행에 대해 여러 쟁점을 검토한다. 최근 유행하는 포스트-코로나 대안들의 타당성, 사회의 위기가 가지는 의미,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행이었던 봉건제 변혁이 오늘날에 주는 시사점, 대안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현재적 쟁점 등을 살펴볼 것이다.

## 2. 최근 유행하는 포스트-코로나 대안들

4차 산업혁명론의 코로나 버전이라 할 언택트 시대론, 인류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환경보호로 설정하는 그린뉴딜,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목소리가 커진 기본소득론, 한계기업을 모두 국유화하자는 고전적 사회주의론. 그야말로 백가쟁명식 대안 경쟁이 뜨겁다. 코로나19 위기가 여러 정치세력에 자신의 대안을 선전할 기회를 준 셈이 됐다.

하지만, 이런 대안들은 몇 가지 심각한 결함이 있다. 최근 유행하는 여러 대안들, 특히 경제와 관련된 대안들의 문제점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짧게 비판해보겠다.

### (1) 언택트 사회

최근 언론에서 가장 많이 소개하는 포스트-코로나 담론은 ‘언택트 사회’이다. 언택트(Untact)는 ‘접촉하다’라는 의미의 ‘콘택트(contact)’와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 ‘언(un)’의 합성어다.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는 비접촉 서비스의 확대를 의미하는데,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자동화, 유통, 금융, 교육, 운송 등에서의 무인화, 디지털화 확대가 언택트 사회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이런 변화는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론의 사례로도 많이 소개됐던 것으로, 언택트 사회는 사실 4차 산업혁명론을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언택트 사회 혹은 4차 산업혁명 전망에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언택트 기술이 생각만큼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감염병 방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언택트 기술이 사용되겠지만, 방역 이후에도 이 기술이 지속해서 확산하려면 수익성 조건이 추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사회를 바꿀 정도의 기술 확산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그 기술을 채택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공지능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이 이윤율을 높인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예로 아디다스는 몇 년 전에 제조업의 대표적 노동집약적 공장인 신발공장을 인공지능 로봇으로 자동화했는데, 수년째 수익성을 맞추지 못해 사치성 고가 신발 생산이나 시장 수요 조사 차원에서만 공장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언택트 유통업의 세계적 상징이라 할 아마존은 수익의 70%를 유통이 아니라 아마존웹서비스(서버 구축 및 데이터 판매)로 벌고 있다. 더구나 언택트 유통업은 배달 부분에서 오프라인 매장에 버금가는 노동력도 이용한다. 언택트 유통업은 수익성에서나 노동을 절약하는 부분에서나 여전히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없다.

언택트 사회의 도래가 아직은 꿈같은 이야기란 점은 자본투자 감소와 수익률 하락이 세계 경제의 대세란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대 내내 세계 경제는 자본축적 둔화와 이윤율 하락 추세가 강해졌다. 신기술이 전면적으로 확산하려면, 그 기술이 적당한 자본투자로 충분히 인건비를 줄이면서, 동시에 생산량을 증가시켜 새로 투자된 자본이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자를 자본생산성의 상승, 후자를 국민소득의 증가라고 보통 말하는데, 현재는 둘 다 그야말로 '짱'인 상태다. 새로운 기술의 전면적 확산은 커녕 장기불황이 대세란 이야기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이런 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 (2) 그린뉴딜

최근 진보진영의 대표적 대안 중 하나가 그린뉴딜 정책이다. 친환경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려,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자는 주장이다. 그린뉴딜은 미국 민주당 진보그룹에서 소개된 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박쥐 서식지 파괴와 같은 환경파괴와 무관치 않고, 코로나19 복구를 위해 정부 주도 투자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근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이란 이름으로 집권 후반기 핵심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의 대안으로써 그린뉴딜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뉴딜의 원조인 1930년대와 현재는 경제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다. 1930년대 대공황은 2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가운데 경제 제도가 그 혁신을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했다. 반면, 현재 경제 침체는 생산성 상승이 장기간 둔화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외부 충격 탓에 발생했다. 비유하자면 1930년대는 건강한 상태로 감염병에 걸린 것이었고, 현재는 기저질환을 앓다가 감염병에 걸린 것이다. 둘의 처방이 같을 수 없다.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세계 경제는 장기불황이 예상됐던 상황이었다. 20세기 초가 인류사의 도약기였다면, 21세기 초는 인류사의 쇠퇴기라 할 수 있는 시기다. 2010년대는 산업 자본주의가 시작된 후 가장 형편없는 성장을 기록한 시기였다. 이런 점에서 1930년대 뉴딜이 오늘날에도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당시 뉴딜은 느닷없이 끊어진 성장의 흐름을 다시 잇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현재는 이어야 할 이전의 성장이 아예 없다. 뉴딜이 작동할 조건이 아니란 것이다.

둘째, 그린 투자의 성격 때문이다. 그린뉴딜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가 핵심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구제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상당한 재정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모험적 투자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친환경 에너지는 상당 기간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킨다. 그런데 기업 이윤으로 생산이 조직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더군다나 대불황에 버금가는 위기 속에서 이런 비용 상승을 감당하는 투자는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 참고로 1930년대 뉴딜은 “비용을 절감하는 생산성 혁신” 속에서 이뤄졌다. 자본주의를 잘 돌아가게 하자는 뉴딜을 어찌 보면 자본주의와 상극일 수도 있는 ‘그린’과 결합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 (3) 기본소득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한 차례 지급되자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한 번 해봤으니, 아예 이를 상시화하자고 주장한다.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정해진 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기본소득의 요체다. 이런 아이디어가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은 4차 산업혁명론과도 관련이 깊다. 4차 산업혁명 주창자들은 하나 같이 인공지능 기계의 확대에 일자리가 사라질 테니, 국민의 존엄을 위해 임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소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런 기본소득 정책은 근거도, 방향도 잘못된 대안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소득 정책은 기술변화가 초래할 미래를 지나치게 과장한다. 인공지능 발전으로 자동화가 확대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산업 사회에서 인구 다수가 실업자인 상태로 산업혁명이 이뤄질 수는 없다. 자본주의적 기술발전은 노동을 절약(노동생산성 향상)하면서 동시에 노동을 증대(생산량 증가)해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예상하는 고실업 산업혁명 시대는 자본주의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은 생산과 소득의 관계를 무시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기본소득은 분배만 생각하지 생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경제이론에 미달하는 것이다.

예로 신고전파는 소득을 생산에 대한 기여로 규정한다. 소득을 높이려면 생산에 더 많이 이바지해야 한다. 이것이 생산을 자극하는 유인책이 된다. 케인스주의는 생산적 투자를 자극할 소득을 이야기한다.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위험한 설비투자에 나서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정부는 기업이 설비투자에 집중하도록 금융소득을 규제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이윤율 동역학을 통해 생산과 소득의 모순을 분석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이윤은 착취의 다른 이름일 뿐인데, 착취가 줄면 투자가 줄고, 고용이 줄면, 노동자 소득이 감소한다. 소득을 얻기 위해 착취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처지이다. 이런 이론을 전제로, 신고전파는 생산성에 비례하는 소득을, 케인스주의는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소득을, 마르크스주의는 임금소득의 모순을 지양할 변혁을 내세운다.

그런데 기본소득에는 어떤 생산이론도 없다. 오직 분배만 있다. 이러한 정책은 복지이론에도 미달하는 것이다. 복지이론은 노동시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임금(사회보장 지출에서 사회보장 세입을 공제한 것) 제도를 설계한다. 독일처럼 낮은 시장임금과 높은 사회임금을 채택할 수도 있고, 스웨덴처럼 높은 시장임금과 낮은 사회임금을 채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금을 나눠주겠다고 한다. 분배의 대상과 방법만 있지, 시쳇말로 “소는 누가 키우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실제로 기본소득을 원칙대로 실시한다면, 결국 세입 증가 없는 세출 증가라는 딜레마에 부딪혀 파산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이후 정부 부채가 급증한 상황을 감안하면, 기본소득은 더더욱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 (4) 국유화 계획경제

거리두기 정책으로 한계기업이 속출하자, 선진국 모든 정부가 기업에 광범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선진국 모두에서 대출, 보증, 자본주입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이 사용 중이다. 규모도 국내총생산의 10~20%에 이를 정도로 크다. 이렇게 정부 지원이 확대되자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일부 정치세력은 이 기회에 국유화 계획경제로 나아가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유화 경제는 소련 사회주의의 실패에서 증명된 것처럼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이다. 법인기업 중심의 미국 자본주의에 뒤처졌거니와 평등과 자유라는 현대의 지향을 추구하는 데도 실패했다. 이미 다른 글에서 여러 차례 쓴 바 있어, 여기서는 요점만 정리하겠다.

우선, 국유화 계획경제는 정부의 실패를 교정할 방법이 없다. 시장의 민간기업은 이윤율에 반응해 생산과 투자를 조정하지만, 계획경제의 국유 기업은 생산과 투자가 효율적 인지, 지속 가능한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국유 기업의 관리자와 노동자가 국민경제 전체를 조망하며 생산과 투자를 기민하게 조정할 유인이 없다면, 과잉투자과 노동 낭비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 국유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며 막대한 부채로 중국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나, 해외 경쟁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분식회계로 관리자와 노동자가 함께 이득을 보았던 산업은행 소유의 대우조선이 최근 사례이다. 국유화 계획경제의 전제조건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생산 현장에서 대안적 윤리와 동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이를 당의 선동과 도덕적 책무로 해결하려다 실패했었다. 21세기의 국유화론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다음으로, 국유화 계획경제에 적합한 정치체제는 자유와 평등을 확대하는 정치체제와는 거리가 멀다. 계획경제에서는 통일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계획이 중구난방이거나 우왕좌왕하면 안 되니 말이다. 그런데 통일성에는 정부의 막강한 권력이, 그리고 일관성에는 계획 입안의 주체인 당의 독재가 필요하다. 소련이나 중국에서 전체주의 정부와 공산당 독재가 재생산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경제에 적합한 정치체제가 전체주의 국가란 것이다. 하지만 21세기 국유화론은 정치체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자신들은 다르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회피할 뿐이다.

## (5) 소결

포스트-코로나 담론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 후반부터 이어지고 있는 세제자본주의의 이윤율 위기를 무시한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 그린뉴딜, 기본소득 같은 대안들은 현재의 자본주의가 몇 가지 기술혁신이나 정부 역할의 변화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부당하게 전제한다. 하지만 2010년대 이윤율이 반등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윤율 하락 속에서 언택트 기술 투자, 그린뉴딜, 기본소득은 기업과 정부의 부채만 늘릴 가능성이 크다. 둘째, 경제 법칙 또는 역사적 경험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은 경제를 분배 문제 또는 소득 재분배 문제로만 접근한 일종의 반(反)경제학이 이론적 기초이다. 국유화 계획경제는 소련의 실패를 우연한 일탈로 해석한, 역사에 대한 무지에 다름아니다.

## 3. 계급과 사회의 위기

코로나19 대유행은 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을 밖으로 드러냈다. 또 그 기저질

환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 병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내적 모순과도 연결되어 있다. 비대해진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한 정부 부채는 현대 경제의 기저질환을 잘 보여준다. 방역의 과학성을 부정하고 대내외 갈등을 키우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작태 역시 현대 정치의 기저질환을 제대로 보여준다. 경제와 정치가, 즉 그야말로 사회가 위기에 빠졌다.

이번 장에서는 사회의 위기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본다. 현 사회가 예전 상태로 복구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인데, 현 위기의 진행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분석의 대상을 중세 봉건제까지 넓혀보겠다.

## (1) 계급사회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 선언』(공산당선언)에서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계급투쟁이 “사회 전체가 혁명적으로 개조되는 것으로, 혹은 투쟁하는 계급들이 함께 몰락하는 것으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의 위기란 바로 이 두 가지 상황과 관련된다. 혁명적 개조 외에는 답을 찾을 수 없는데, 아직 그런 개조가 시작되지 못했거나, 또는 개조의 방향을 아예 찾지 못하고 사회 전체가 몰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황 말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사회의 위기이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계급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계급은 간단하게 말해 지배하는 집단과 지배당하는 집단 사이의 구분이다. 이때 지배하는 계급은 잉여노동을 배타적으로 취득할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지배당하는 계급은 그 잉여노동을 제공하는 집단이다.

여기서 노동은 사회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의미하며, 잉여노동은 생산자가 지출한 노동 중에 생산에 소모된 것들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노동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 잉여노동은 생산과 무관한 욕구 충족에 이용되거나, 아니면 생산 확대를 위한 축적에 이용될 수 있다. 참고로, 이런 잉여노동은 봉건제에서는 “곶간에 가득한 쌀가마니”처럼 지주의 잉여생산물로, 자본주의에서는 “삼성전자 순이익 40조 원”처럼 자본가 또는 기업의 이윤으로 나타난다.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에서 잉여노동을 더 많이 추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피지배계급의 몫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고, 몫은 그대로 두더라도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겠다. 조선 시대로 예를 들어보면, 농민의 공납이나 군역 부담을 늘리는 ‘가렴주구’ 정책이 전자의 사례, 노비를 소작농으로 만들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할 동기를 준 후 지대를 걷는 것이 후자의 사례이다. 현대의 한국 사회에서는 1960~1980년대 수익성 낮은 수출 대기업들이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장시간 저임금 노동조건을 유지한 것이 전자의 사례, 1990년대 이후 대기업들이 대규모 자동화 투자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생산성과

노동강도를 높인 것이 후자의 사례이다.

그렇다면 지배계급은 어떻게 피지배계급에서 잉여노동을 추출하고 착취할 수 있는가?

기본은 가장 원초적인 힘, 즉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폭력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현대 이전의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목숨을 유지할 수 없었다. 소작농은 지주가 요구하는 지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적, 사적으로 폭행을 당할 수 있었다. 이런 폭력은 전통적으로 가문으로 불린 소수의 혈통 집단이 보유했는데, 이들은 국가의 군대나 가문의 사병을 이용해 천년 넘게 한반도에서 지배계급으로 대대손손 군림할 수 있었다. 이런 지배계급의 구성은 천년 넘게 큰 변화도 없었는데, 예로 조선의 핵심에 있었던 가문들(전주 이씨, 안동 권씨, 파평 윤씨 등)은 그 뿌리가 통일신라 시대 귀족이나 고려 개국 공신이였다.

반면, 피지배계급인 노비나 농민이 조직적인 폭력을 장기간 보유한 사례는 없었다. 지배계급에 대규모로 편입되거나 아예 지배계급의 교체에 성공한 사례도 없었다. 예로 고려 말 땅이·망소이의 난부터 조선 말 갑오농민전쟁에 이르기까지, 농민이 난을 일으키는 경우는 대부분 가혹한 세금으로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였는데, 이들은 훈련된 지배계급의 군대를 당할 만큼 제대로 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없었고, 민란의 기간도 길어야 수개월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대에 이르러 착취하는 힘은 물리적 폭력에서 경제적 방법으로 바뀌었다. 노동자가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능력과 임금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과정이 바로 착취였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는 노동생산물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며 노동한 시민에게는 임금을 보상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노동생산물의 가치는 항상 임금의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소유법칙을 통해 경제적 방법으로 잉여노동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경제적 방식에서 기업은 노동자의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다. 해고할 권리로 노동자의 노동능력을 통제할 뿐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의지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처럼 임금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노동자에게 해고는 생존과 직결된 위협이 된다. 인신적 구속이 아니라 자발적 근로계약으로 노예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경제적 방법에 따른 착취 체계에서 폭력은 국가에 의해 독점된다. 대외적 폭력은 군대가, 대내적 폭력은 경찰이, 그리고 그 폭력의 집행은 법으로 정해진다. 법은 재산의 소유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며,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노동생산물을 소유하고 노동하는 사람은 임금으로만 보상받는다. 자본주의적 소유법칙을 수호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폭력을 사용하는 대상을 “소유법칙 수호”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모두 시장 법칙에 맡긴다. 이전 사회보다 폭력의 범위와 잔혹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영역도 시장으로 인해 이전보다 넓어졌다. 물론 그렇다고 지배계급의 잉여노동 추출과 착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 방법이 좀 덜 폭력적으로 진화했을 뿐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피지배계급 저항 역시 이전처럼 직접적 폭력 충돌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법의 제정이나 집행 과정에 노동자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개입하거나, 매일 매일의

분배를 둘러싼 현장 투쟁에서 임금소득자의 힘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저항한다. 정당과 노동조합이 이런 역할을 하는 대표적 조직이다. 물론 소유권 자체를 흔드는 저항(점거 파업)에서부터 급진적 사상의 선전에 이르기까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전 같은 물리적 폭력을 쓰기도 한다. 폭력이란 지배의 코어는 현대에도 유효하다.

요약해보자. 지금까지의 인간 사회 역사(정확히는 기록된 역사)는 곧 계급사회의 역사였다. 폭력을 보유한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고, 잉여노동을 추출, 착취한다는 근본 원리는 노예제든, 봉건제든, 심지어 현대의 자본주의든 같다. 계급사회의 법칙이 곧 역사의 법칙인 셈이다.

## (2) 사회의 위기

사회의 위기는 이런 역사법칙하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계급사회의 위기란 간단히 말해 지배계급이 '지배'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그렇다면 지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폭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거나, 잉여노동을 충분히 추출, 착취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노스(Douglass C. North)는 지배계급의 속성을 폭력(violence)과 지대(rent)의 교환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 사회에서는 폭력이 사라질 수 없다. 인간 욕구보다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가 자원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다른 일부를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즉 무한한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인간 사회는 폭력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폭력이 난무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발발하면, 사회는 존속할 수 없다. 폭력을 관리해야만 사회가 지속될 수 있다. 그렇다면 폭력은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가? 노스는 사회의 해체보다 존속이 누구에게나 이득이기 때문에, 폭력에 우위를 갖춘 사람들 또는 집단들이 폭력을 내려놓는 대신 지대를 공유할 수 있는 질서(social order)를 수립한다고 주장한다. 참고로 여기서 지대는 토지 임대료만이 아니라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얻는 모든 이득을 지칭한다. 경쟁을 통해 얻는 이득은 새로운 가치의 창조와 관련되지만, 지대로 얻는 이득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과 비슷하다. 지배계급의 지대는 피지배계급의 손해와 크기가 같다.

지배계급은 이런 지대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동맹이다. 지대를 얻는 대가로 폭력을 규제하는 규칙에 합의한 집단이다. 예를 들면, 조선 초기 왕족과 공신들이 보유한 사병이 삼군부로 귀속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사병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조권, 노비, 관직 등의 특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지배계급인 양반은 군대를 거느리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왕의 군대와 관료제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 현대에 와서도 이런 폭력과 지대의 교환은 지속됐다. 예로 와인 게스트(Barry R. Weingast)와 모종린은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의 지대공유 동맹을 약탈국가, 발전국가, 경제 포퓰리즘, 금권정치로 나누어 분석했다. 약탈국가 동맹에서 이승

만 일파, 친일파, 경찰, 반공 깡패 등은 적산과 미군 지원품을 약탈하며 지대를 공유했다. 발전국가 동맹에서는 박정희부터 전두환 정부에 이르기까지 폭력을 유보한 대가로 정부를 독점한 군부와 경제적 힘을 폭력으로 전용하지 않은 대가로 독점을 보장받은 재벌이 지대를 공유했다. 1987년 민주화부터 시작된 경제 포퓰리즘 동맹에서는 군부에 억압당한 일부가 지대를 공유할 자격을 얻은 것이 특징이었는데, 지역개발이나 복지자금 배분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일부 지역 및 계층의 유권자, 그리고 임금인상의 대가로 급진적 행동을 포기한 대기업 노동조합 등이 지대를 공유하는 동맹에 새로 포함됐다. 군부가 정치에서 제거된 후 본격화 된 금권정치 동맹에서는 이전의 동맹에서 재벌이 정부를 포획한 것이 특징이었다. 재벌들은 유력 정치인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했고, 언론을 이용해 여론도 조작했다. 하지만 재벌의 방종이 도를 넘어 1997년 국가가 부도나 버리자, IMF에 의한 강제 개혁이 진행돼 경제 제도의 신자유주의적 합리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

두 학자가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노무현 이후 지대공유 동맹은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면 타당할 것이다. 재벌의 금권정치 일부분을 개혁/보수 같은 허구적 진영이 가져갔고, 반일민족주의, 권력기관 개혁 같은 내용 없는 선정적 구호를 앞세워 386세대 정치인이 새로운 엘리트 그룹으로 성장했다. 정경유착으로 탄핵당한 박근혜가 금권정치의 유산을 보여줬다면, 촛불시위와 적폐청산으로 권력을 잡은 집권 386세대는 포퓰리즘 정치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새로운 정치 엘리트들은 개혁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나 자녀교육 같은 문제에서는 기득권층의 전형적 부도덕함을 가지고 있다.

폭력과 지대를 교환하는 지배계급의 동맹 맞은 편에는 당연히 그 지대를 공급해야 하는 피지배계급이 존재한다. 조선 시대에는 인구의 30~40%에 달한 노비와 균역과 공납의 짐을 짊어져야 했던 40~50% 상민이 그러한 피지배계급이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는 경제활동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영세자영업, 비정규직, 특수고용, 하청기업 노동자 등이 지대동맹을 떠받치는 집단이다. 조선 시대 피지배계급은 신분제로 재생산되었는데, 현대의 피지배계급은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를 확대하고 고착화하는 다양한 경제적 제도로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계급사회의 위기는 지배계급이 폭력의 규제에 실패할 때이다. 폭력과 지대의 교환 메커니즘이 원활하지 않아 동맹 내부에서 이익을 둘러싼 폭력이 증가하거나,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 대해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사회의 존속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폭력과 지대의 교환이 실패하는 상황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폭력이 급증해 기존 제도가 규제에 실패하는 경우이다. 전쟁과 부패가 대표적이다.

예로 진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중국의 봉건 국가가 무너질 때는 대부분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만주나 서역에서 외적의 침입이 강해져 군비가 급증했고, 환관과 외척의 권력이 강해지며 부패가 심각해졌으며, 군비 부담과 부패로 생존위기에 닥친 농민

들이 여러 지역에서 붕괴했다. 대외 전쟁과 부패가 많아지면, 기존에 유지되던 지대와 폭력의 교환 방식에 교란이 발생한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혼란의 시대를 거쳐, 새로운 국가가 폭력과 지대의 교환 방식을 다시 세팅해야만 한다. 이것이 2천 년 넘는 중국 봉건제의 역사였다. 물론 현대 국가에서도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보는 것처럼 천연자원 또는 마약 등의 이권이 생길 때 폭력이 급증하며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이나, 콩고와 코트디부아르의 천연자원을 둘러싼 내전이 대표적 사례이다. 노스는 21세기에도 국가가 공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절반 이상이라 분석했다.

둘째, 가장 중요하고 장기적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잉여노동을 충분히 착취하지 못해 지배계급이 공유할 수 있는 지대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이다.

봉건제 농업경제에서 잉여생산물은 기본적으로 인구증가, 토지증가, 토지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토지가 그대로인 조건에서 인구만 증가하면,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식량이 증가해 잉여생산물이 감소할 것이다. 지배계급이 잉여생산물을 그대로 유지하면, 굶어 죽는 피지배계급이 증가하는데, 이런 경우 보통 민란이 발생해 사회가 혼란해진다. 식량을 생산하는 토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농법 개선으로 토지당 식량 생산(토지생산성)이 증가하면, 잉여생산물도 증가한다. 그런데 이렇게 식량 사정이 나아지면 인구도 보통은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 식량 생산의 증가보다 인구의 증가가 빨라질 경우 잉여생산물이 다시 감소하고 나중에는 인구도 정체 또는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인구압력이 증가해 사회적 위기가 닥치는 상황이 바로 이른바 ‘맬서스 함정’이다.

봉건제 농업경제에서의 인구압력은 서유럽에서 16~17세기에 심각했다. 14세기 중반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대폭 감소한 이후 14세기 말부터 인가와 1인당 소득이 모두 빠르게 증가했는데, 15세기 말에 이르면 인구는 증가하지만, 농업 생산성이 정체해 1인당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다. 맬서스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이때부터 유럽 봉건제는 위기에 직면했는데, 백년전쟁 같은 봉토를 둘러싼 전쟁이 발발했고, 동로마제국이 멸망했으며, 종교개혁 운동, 농민전쟁 등도 유럽 전역에서 발생했다. 이후 유럽은 두 세기 넘게 이어진 봉건제 붕괴를 거쳐 현대로 이행을 시작했다. 봉건적 관계로는 지대를 공유하는 동맹을 더는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에스파냐는 잉여노동을 늘리기 위해 아메리카 식민지를 만들어 원거리 무역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고, 네덜란드는 독립전쟁 이후 발트해 곡물 운송을 시작으로 상업혁명을 일으켰다. 봉건제 변혁의 거대한 물줄기가 이렇게 열리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 중세 유럽 같은 인구압력은 없었다. 논의 쌀 생산이 밭의 밀 생산보다 훨씬 생산성이 좋았고, 13~14세기(송나라 말기부터 원나라까지)에 유럽의 흑사병 창궐 시기와 비슷한 인구 감소가 있기도 했지만, 명청 시기에 농법 혁신, 수리시설 건설 등이 꾸준하게 이어져 6백 년 넘게 인구가 연평균 1% 가까이 지속해서 증가할 수 있었다. 물론 15세기 이후 중국의 1인당 소득은 서유럽보다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인구증가만큼만

딱 국내총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종의 봉건적 지속성장 상태라고 보면 되겠다. 전쟁과 부패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지는 변화를 겪기도 했지만, 19세기 중반 서유럽의 침략을 받기 전까지 당대 지배계급의 동맹이 근본적으로 변할 만큼 잉여노동의 감소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자본주의적 산업경제에서는 기술혁신과 자본축적을 통해 인구증가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를 장기간 성장시킬 수 있다. 인구압력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오히려 경제성장 이후 인구 감소 또는 고령화가 급속히 발생할 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자본주의에서 지배계급의 잉여노동 착취와 관련한 문제는 이윤율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런데, 자본주의 이윤율 경제의 특징은 상승의 힘과 하락의 힘이 같다는 모순이다. 이윤율 상승의 동력인 기술혁신과 자본축적은 혁신의 곤란이 누적되면서 이윤율을 끌어내리는 힘으로 작동한다.

자본주의적 착취는 모든 자원을 소모하는 봉건적 착취와 달리 오히려 자본과 인구를 늘리면서, 즉 과잉자본으로서 금융화, 과잉인구로서 실업자를 만들면서 위기에 봉착한다는 특징도 있다. 마르크스는 이런 특징을 분석하며 자본주의적 성장의 필연적 결과가 인류의 비참함(misery)이라고 지적했다. 2008-09년 금융위기에서 경험했듯 금융화는 경제체제의 혼란을 심화한다. 2020년에는 최악의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투기의 전장이 되어 경제적 혼돈을 키우고 있다. 실업자와 반(半)실업자(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의 증가는 시민 간 경쟁을 격화시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갈등 사태(이른바 인국공 사태) 같은 도덕적 타락을 심화하고, 빈부격차로 표현되는 상대적 빈곤, 그리고 꼰대, 7포 세대 등으로 표현되는 세대적 불공평을 키운다.

요즘 문제가 되는 포퓰리즘 정치는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적 발전의 비참함(통상 궁핍화 경향이라고 번역된다)을 성장의 토대로 삼는다. 포퓰리즘 정치는 내적 모순에 눈을 감고 내외부에 가상의 적을 만들어 공격하는 행태를 일컫는데, 인종주의, 민족주의, 지역주의, 세대적 갈등, 입법부 무력화, 사법부 장악, 탄핵의 일상화, 팬덤 정치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지배계급의 현대적 동맹은 18세기 이래 자유주의 민주정의 다양한 제도와 조직을 통해 유지됐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이후 이윤율 하락으로 사회 불안이 커지면서, 자유주의적 동맹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늘어나다 보니 아예 기존 제도를 해체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확대되는 중이다. 미국의 트럼프나, 한국의 문재인이 하는 정치가 정확히 이러하다. 브렉시트를 이끈 영국의 보리스 존슨, 이탈리아의 2천 년대를 망쳐놓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와 금융위기 이후 정치위기를 상징하는 오성동맹 등도 이윤율 위기가 지배계급의 현대적 동맹의 위기로 이어진 사례이다.

### (3) 소결

계급사회의 위기는 지배계급의 위기이다. 잉여노동을 착취하는 지배계급은 폭력을 보

유한 집단들의 동맹이다. 이 동맹은 폭력을 규제하는 대가로 지대를 공유하는 사회 질서를 수립한다. 그런데 이 질서는 외침과 부패로 폭력이 과잉되는 조건이나, 잉여노동 자체가 충분히 추출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수천 년간 여러 국가가 흥망성쇠를 겪었을 때의 조건이 전자였다. 그리고 서유럽 봉건제가 몰락하고 현대로 이행을 시작할 때 조건이 후자였다.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잉여노동을 충분히 추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윤율이 하락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윤율 하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때, 지배계급의 동맹을 현대적으로 제도화한 자유주의 정치체제도 몰락할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은 자유주의 정치체제가 타락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포퓰리즘은 폭력과 지대의 교환이라는 지배계급의 사회 질서를 허구적 진영의 투쟁, 모호한 외부의 악마를 상대로 한 투쟁으로 변질시킨다. 인종주의적 린치, 경찰폭력의 확대, 이해관계자들의 직간접적 폭력 행위 등으로 여러 형태의 폭력이 선진국에서조차 크게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심화시킨 것은 현대 사회의 이윤율 하락과 포퓰리즘 정치라는 기저 질환이다. 한국의 이윤율은 1990년대 폭락했고,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하락 속도가 느려졌는데, 2010년대 세계금융위기에 이은 코로나19 위기로 다시금 하락이 빨라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본격화된 포퓰리즘 정치는 박근혜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만개했고,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현 집권세력은 국민을 진영 간 내전 상태로 내모는 상황이다. 지배계급의 질서가 무너지며 증가하는 폭력은 피지배계급이 계급지배를 지양하는 대안 사회를 건설하지 않는 한, 마르크스가 말했던 투쟁하는 계급들의 공멸로 사회를 이끌 뿐이다.

#### 4. 이행의 문제: 봉건제 변혁의 시사점

현대 사회가 봉착한 문제의 성격은 단기적, 상황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 근본적이다. 해결책이 간단치 않다. 역사적으로 현대 사회의 결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보려던 시도는 사회주의였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국유화 경제를 강령으로 삼은 20세기 사회주의는 소련의 몰락과 중국의 타락으로 끝나버렸다. 또한, 21세기의 다양한 사회주의 조류들은 소련의 오류를 답습하거나 자유주의에 미달하는 대안으로 존재할 뿐이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있지만 새로운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이번 장에서는 기존 사회의 근본적 결함을 해결하며 새로운 사회로 이행한 역사적 사례를 검토하며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의식적 노력으로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룬 사례는 서유럽의 봉건제 변혁이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진 현대 혁명들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해보자.

## (1) 봉건제 표준이었던 중국

중국에서는 기원전 2백 년부터 시작하는 한나라 시기에 봉건제가 정착되었다. 중국 봉건제의 특징은 모든 땅은 황제의 것이라는 왕토(王土)사상, 율령제라 불린 국가 차원의 성문법, 군현제로 불린 황제의 지방관리 파견 등이었다. 유럽과 비교해보면 중앙집권적 봉건제가 중국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왕토사상에 따라 모든 지대는 명목적으로는 황제가 취득했다. 말하자면 지대와 세금이 같았다. 다만, 농민이 황제에게 직접 세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군현제의 지방관리가 황제의 지대를 대신 수취해(수조권) 그 일부를 황제에게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지방관리는 그 수조권을 세습할 수도 있었는데, 바로 이 지방관리가 중국 봉건제의 지배계급이었다. 이들이 바로 세가(世家)였다. 이들은 이후 황조가 부패로 약해지면서, 작은 지주들의 토지를 겸병해 지방호족 가문으로 성장했다. 이를 문벌(門閥)이라고 불렀는데, 문벌 지주는 나라가 망해도 수백 년간 대대손손 부와 권력을 유지했었다.

중국에서는 4~5세기 위진남북조 시대 번성했던 문벌 지주가 6~9세기 수당 시대에 약화했고, 10세기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서 과거제로 선발된 품관(品官)으로 교체되었다. 중앙집권적 봉건제가 재건된 셈이었다. 토지개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황제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줬고, 더불어 지방관리가 수조권이 아니라 토지만 상속할 수 있도록 개혁(지주전호제)한 것도 중요한 개혁이었다. 제도는 중앙집권화하면서 소유제는 분권화한 것이다. 11~13세기 정점에 이른 중국 봉건제는 품관 지주로 대표되는 지배계급이 여러 혁신을 바탕으로 토지 생산성을 크게 상승시켰다. 그 결과 송나라 기간에 인구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남 개발에 성공해 화북 농업보다 강남 농업 생산량이 더 커졌고, 강남에서 면화 재배가 일반화되어 면직물도 본격적으로 생산되었다. 농서 간행도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중세 유럽의 경우 로마가 몰락한 이후 6세기부터 9세기까지 약육강식의 약탈이 반복되는 무정부적 암흑기가 이어졌다. 무정부적 상태에서 지역 토호들이 서로 토지와 노예를 빼앗기는 싸움을 3~4백 년간 계속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주들은 소작인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땅을 빌려줬고, 시간이 흐르며 이 땅은 상속이 가능한 봉토(封土, feud)가 되었으며, 봉토를 받은 소작인은 그 대가로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봉토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봉신(封臣, vassal)이 됐고, 봉토가 매매 가능한 부동산이 되면서, 봉신은 봉토의 영주(lord of manor)로 커졌다. 영주 중의 영주라 할 왕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쟁을 위한 충성을 확보했다. 왕은 더 많은 땅을 가졌고 당연히 치를 수 있는 전쟁의 크기도 컸다. 온 사방에서 싸움이 빈번했던 영주들은 이런 왕의 보호를 받아야만 봉건적 관계와 지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대형 지주인 왕과 중소형 지주인 영주들이 왕국(kingdom)이란 이름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이 바로 10세기 완성된 서유럽 봉건제의 특징이었다. 중국과 비교해보면 문벌이 주도했던 위진남북조 시기 봉건제와 비슷한 셈이었다.

유럽에서 중앙집권적 봉건제가 들어선 것은 14~15세기에나 들어서였다. 백년전쟁으로 불리는 장기간의 전쟁 효과로 지방 영주 권력이 약해지며 왕권이 강해졌다. 14세기 흑사병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해, 공황 시기 기업 간 인수합병처럼 중소 영주에 대한 왕과 대형 영주들의 흡수가 많아진 것도 중앙집권적 국가 건설이 가능했던 이유였다. 어쨌거나 이때까지는 중국 봉건제가 서유럽보다 400~500년 앞섰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가 봉건 선진국, 유럽이 봉건 후진국이었다.

봉건제의 성장과 변화를 기준으로 보자면, 봉건제의 표준은 유럽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우리가 워낙 서유럽 중심 역사를 배워서 그렇지, 사실 약한 왕권의 유럽 봉건제는 로마 제국 몰락 이후 중국과 같은 중앙집권적 봉건제를 만드는 데 실패한 결과였다. 중국의 경우 한나라가 몰락한 이후 위진남북조 시대가 3세기 초부터 6세기 말까지 3백 년 넘게 이어졌는데, 서유럽은 이 과정을 몇 배 더 길게 겪은 셈이었다.

봉건제 표준을 중국으로 본다면, 봉건제의 쇠퇴는 14세기 명나라 시기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명나라는 건국 초기 대대적 개혁과 농업 혁신을 통해 세수를 두 배 이상 늘리기도 했지만, 곧이어 환관의 전횡으로 부패가 만연했다. 그리고 향신(鄉紳) 지주의 토지 겸병 증가와 농민반란이 빈번해지며 결국 청나라에 패망하고 말았다. 참고로 향신은 과거는 합격했지만, 임명을 받지 못한 대기자들을 지칭하는데, 이들이 관료의 특권을 부여받고 고향으로 내려가 토지겸병과 상업으로 부를 축적해 명청 시기 지배계급의 뿌리가 되었다. 한편, 17세기 청나라는 건국과 함께 세제개혁과 농업 혁신으로 체제 위기를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역시 곧이어 환관과 향신의 부패로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는데, 19세기부터 유럽의 침략과 개신교 영향을 받은 농민반란이 발발해 봉건제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 (2)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행한 영국의 혁명

유럽의 경우 10세기 즈음 자리를 잡은 봉건제가 중국과 비슷하게 14세기부터 위기에 빠졌다. 흑사병으로 인구가 감소해 봉건 영주들은 농사를 위해 임금노동자를 고용했고, 더불어 거래의 효율을 위해 지대도 화폐로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인건비의 대폭적 상승을 낳아 지배계급의 잉여생산물 착취를 어렵게 만들었다. 더구나 아시아와 거래도 증가했는데, 사치재 수입이 증가해 무역적자가 크게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서유럽에서는 상품, 화폐, 시장의 확대가 진행됐다. 다만 이런 변화가 자본주의적 관계의 등장까지는 아니었고, 폴 스위지의 지적처럼 봉건제도 자본주의도 아닌 어정쩡한 체제가 2백 년 가까이 이어진 것이었다.

중국과 서유럽의 분기점은 이 시기 봉건제 위기에 대한 양쪽의 반작용 차이에서 비롯됐다. 앞서 본 것처럼 중국은 명청 시기에 나름대로 혁신에 성공했던 반면, 유럽은 혁신에 실패하면서 변혁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잉글랜드의 경우 왕이 세금을 걷을 능력이 안 돼 영주들을 모아 의회를 만들었다. 왕은 법을 만들기 위해 많을 때는 700명 넘는 영주에게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 나중에는 농노였지만 도시로 도망와서 상인으로 성공한 사람들까지 의회에 참여시켜 동의를 구했다. 이런 의회는 지금 보면 민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봉건제 기준으로 보면, 무능이었을 뿐이다. 15세기 이후의 왕권 강화 역시 혁신의 결과라기보다는 봉건제 혁신의 실패 결과로 영주들이 몰락한 결과였다. 역설적이지만, 서유럽은 혁신의 실패로 말미암아 봉건제 변혁으로 떠밀려 갔다.

대대적 변화가 시도된 곳은 16세기 중반의 네덜란드였다. 네덜란드는 에스파냐(스페인) 왕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네덜란드 귀족들과 상인들은 과도한 세금과 종교탄압에 불만이 많았다. 이런 와중에 네덜란드에 파견된 에스파냐 총독이 모든 상품거래에 10% 세금을 매기자 귀족과 상인이 폭발했다.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조직되어 에스파냐 함대를 격파하고 80년간의 전쟁 끝에 독립된 왕국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이때 네덜란드 귀족과 상인이 독립혁명의 대의로 내세운 것이 바로 자유였다. 네덜란드 귀족과 상인은 자유를 변영과 정의의 원형으로 규정했고, 세금이 변영과 정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금으로부터의 자유는 독립혁명이 발전하면서 에스파냐 왕조에 대한 자유, 즉 네덜란드의 국가 주권 이념으로 발전했다. 예속과 복종이란 봉건적 질서에 대한 자유와 주권이라는 현대의 이념이 이렇게 출현했다.

네덜란드의 자유는 영국(잉글랜드)혁명에서 새로운 정치체의 이념으로 발전했다. 17세기 중반 잉글랜드의 왕들은 수시로 세금을 걷어 귀족과 상인들의 반발을 자주 샀는데,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즈음 찰스 1세는 전쟁자금을 구하러 납세자인 귀족과 거대상인들을 의회로 모았다. 앞서 봤듯 의회는 충분하지 못한 왕권을 보완하는 제도로 세금 문제를 협의하는 납세자 대표들의 회의장이었다. 하지만 이 의회는 찰스 1세의 의도와 달리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결국, 왕은 군대를 동원해 의회 내 반대파를 체포하려 했고, 의회로 결집한 귀족과 상인들은 크롬웰을 사령관으로 삼아 국왕의 군대를 쳐부수고 찰스 1세를 처형했다. 그리고 의회가 주도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런데 사령관이었던 크롬웰은 전쟁이 끝난 후 의회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호국경으로 칭하며 독재자로 군림했다. 그리고 크롬웰이 사망한 뒤 왕권파에 의해 군주정이 복권됐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이 멈춘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왕 제임스 2세가 종교탄압을 자행하며 프랑스의 절대왕정을 모방하려 하자, 의회가 네덜란드 오렌지공 윌리엄과 함께 명예혁명으로 제임스 2세를 끌어내렸다.

명예혁명에서 의회는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 중심의 입헌정치를 제도화했다. 이것이 현대 정치제도의 원형 중 하나인 입헌군주제이다. 혁명 과정에서 자유는 왕을 처형한 대의명분이었다. 자유는 왕에 대한 자유이자, 인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주권을 표현했다. 혁명 이후 선포된 권리장전에서 국왕도 건드릴 수 없는 의회와 국민의 제반 권리가 정해졌다. 입헌군주제는 경제 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의회는 혁명이 세금으로 촉발된 것이니만큼 왕의 재정권을 세세하게 제한했다. 왕은 관세를 징수할 수 없었다. 왕에게는

4~5년간의 단기 수입만 의회의 허가를 전제로 허용됐다.

그런데 이런 왕권에 대한 제한이 의도치 않게 경제 제도를 혁명적으로 발전시켰다. 우선, 명예혁명 이후 국가 재정에 경제 원칙이 적용됐다. 마음대로 세금을 걷을 수 없게 된 왕이 왕정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재산 증식과 상업 활동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전 왕들이 전쟁을 위해 자산 대부분을 썼던 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이였다. 재정정책이라 부를 수 있는 국가 제도가 이렇게 탄생했다. 다음으로, 중앙은행과 법정화폐가 만들어졌다. 당시 공동 군주가 된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는 재정 파탄 상황에서 프랑스와 전쟁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의회에 재정권이 있어서 전쟁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왕정은 런던의 은행가들에게 손을 벌렸다. 은행가들은 이 과정에서 엄청난 돈벌이 기회를 찾아내, 국가에 금화를 빌려주는 대신 왕이 지불을 보증하는 은행권을 만들었다.

당시 은행의 사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예치된 금화 중 일부를 대출해주고 이자 수입을 얻는 것이 핵심이였다. 그리고 18세기 들어 런던의 은행들은 신종 대출기법으로 금 예치증서인 은행권을 만들어 유통했다. 무겁고 나누기도 불편했던 금화 대신 은행권이 크게 인기를 얻어 급속도로 보급됐다. 그런데 이 은행권은 수량에 제한이 많았다. 은행이 예금으로 보유한 금만큼만 발행할 수 있었고, 은행이 파산할 경우 은행권도 휴짓조각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은행가들이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 은행권 이였다. 은행가들은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출자로 잉글랜드은행을 만든 후 정부에 120만 파운드의 금화를 대출했다. 그리고 채무에 대한 영구이자와 국가가 보증하는 은행권을 발행할 권리를 요구했다. 법정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예금 유치에서나, 은행권 유통에서나 엄청난 이득이였다. 잉글랜드은행은 예금보다 더 많은 은행권을 발행해도 정부 보증으로 파산 위험을 낮출 수 있었다. 사용자들도 정부가 보증하는 은행권이니만큼 일시에 금화로 태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현대적 중앙은행이 이렇게 탄생했다.

중앙은행과 법정 은행권의 긍정적 효과는 단지 소수 은행가의 이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법정 은행권이 유통되는 경계가 국가주권의 경계와 같았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주권과 경제적인 주권이 결합했고, 비로소 현대적 의미의 국가경제가 만들어진 것이였다. 영국에서는 현대를 만드는 혁명을 통해 자본순환의 범위로서 국가가 만들어졌다. 자유는 영국혁명을 거치며 이런 식으로 시장경제 또는 화폐경제와 깊숙이 결합했다.

영국혁명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로도 확장됐다. 당대 혁명의 사상적 기초를 만든 로크는 자유를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로 정의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소유권은 신이 인간 개개인 모두에게 준 자연법으로 타인이나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 이 재산은 개인이 노동으로 생산한 것이다.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노동을 한다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는 지주에 구속되어 노동을 하는 농노와 달리 개개인이 자신의 육체와 의식을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소유권으로써 자유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소유하는 것이다.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 국가는 소유권을 지키고 발전시

키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부르주아 혁명이 이렇게 시작됐다.

### (3) 프랑스의 실패

18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재산을 가진 자본가 계급과 무산자 계급이 공화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돌했다. 18세기 말 프랑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왕정의 무능과 사치로 국가 재정은 고갈됐고, 군주제를 지지하는 보수파, 헌법과 군주의 공존을 주장하는 중도파, 그리고 완전한 공화제로 이행하자고 주장하는 급진파가 서로 투쟁을 벌였다. 이런 와중에 주변국들까지 군사적 침략을 감행했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서 1793년 공화국이 건설됐고, 국왕 루이 16세가 처형됐다.

프랑스 혁명에서는 1789년 국민의회가 채택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인권선언)>을 계기로 자유와 평등의 관계가 전면에 등장했다. 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유, 재산, 안전, 저항 등 자연법적인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 시민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롱드파가 주도한 공화국의 첫 헌법은 그 평등한 인간을 납세액에 따라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으로 나눈 후에 능동적 시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다. 이에 분노한 민중들이 1793년 국민공회에 난입해 지롱드파를 축출했다. 그리고 국민공회의 급진파를 대표했던 자코뱅파가 권력을 잡았다.

자코뱅파에게 권력을 쥐여준 것은 상퀼로트로 불리던 파리 서민계층의 대중운동이었다. 상퀼로트는 프랑스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력이다. 제헌의회 설립과 인권선언 채택의 토대가 된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 국왕이 민심을 상실한 계기가 된 1791년 샹드마르스 국왕퇴위 시위, 제1공화정 설립과 루이 16세 처형의 계기가 된 1792년 텔레르 궁 습격과 봉기코뮌 결성, 지롱드파 몰락과 자코뱅파의 집권을 이뤄낸 1793년 민중봉기 등이 모두 상퀼로트가 주도한 것이었다. 심지어 자코뱅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도 ‘반동분자’의 척결을 외쳤던 상퀼로트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수공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상퀼로트는 평등주의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소유권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평등을 위해 소유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상퀼로트의 지지로 집권한 자코뱅파는 1793년 새 헌법에서 신성불가침의 권리였던 소유권을 법질서 내의 제한적 권리로 조정했고, 생존권이 소유권에 앞선다는 점도 명시했다. 다만, 1793년 헌법은 실제 실현되지는 못했는데, 자코뱅 지도자들이 헌법을 정치적 장식 정도로 생각했던 탓이었다. 로베스피에르의 당시 관심은 유산자와 무산자의 계급투쟁이 아니라 민중을 대외 전쟁에 동원하는 것이었다. 결국 계급 갈등은 애국주의로 봉합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 로베스피에르는 상퀼로트 민중운동을 탄압했고 자코뱅 내 급진파를 숙청했다.

프랑스혁명의 상징이라 할 인권선언은 자유와 평등을 동등한 것으로 표현했다. 인권선언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또 권리에서 평등하다”라고 시작했다. 신분제 같

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인간이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는 없고, 노예와 같은 자유가 없는 인간이 평등할 수도 없으니, 자유와 평등은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불완전한 것은 자명했다. 자유와 평등이 서로의 조건이 된다는 점은 당대 프랑스 혁명가들의 논리적 결론이었다.

하지만 평등과 자유는 논리적 자명성과 달리 현실에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소유권이 문제였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루소는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것을 소유권의 필연적 결과라고 설명했다. 선한 개인도 집단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다른 이를 질투하는데, 생산력 발전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 증가하면 이를 두고 새로운 형태의 경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재산을 더 소유하기 위한 착취와 약탈이 선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을 억압한다.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이 동시에 평등해지려면 “최초의 인간이 갑자기 주변의 땅에 울타리를 치고 ”이 땅은 내 땅”이라고 선언했을 때, 모두들 달려가 그 울타리를 부수고 땅에서 나는 결실은 공동의 소유이며, 땅 자체도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루소처럼 재산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의 사회적 관계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혁명을 주도한 자본가들(부르주아지)도, 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던 농민들도 사적 재산권을 필사적으로 옹호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무산자 계급인 노동자들도 재산의 재분배를 바랐지, 재산 소유가 없는 세상을 바라지는 않았다. 루소의 평등은 현실의 이해관계 앞에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을 끌어 내리는 ‘질투’를 기반으로 한 평등으로 타락할 가능성을 내포했다.

어쨌거나 프랑스는 1789년 혁명, 1792년 제1공화정 수립, 1799년 나폴레옹 쿠데타, 1804년 제1제정, 1814년 왕정복고, 1848년 2월 혁명과 제2공화정, 1848년 루이 보나파르트 대통령 당선, 1852년 제2제정, 1871년 보불전쟁 패배, 파리코뮌, 제3공화정으로 그야말로 한 세기 가까운 좌충우돌의 시기를 거쳤다. 정치체제 현대화가 19세기 말에야 끝났다. 결과로 놓고 보면, 영국은 물론이거니와 미국보다도 한 세기나 뒤진 것이었다. 프랑스의 이러한 정치적 정체 상태는 당연히 경제적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1688년 대비 1871년 1인당 GDP를 보면, 영국이 160% 증가한 반면, 프랑스는 77% 증가에 그쳤다. 프랑스의 경우 19세기 후반에는 유럽의 후진국이었던 독일에도 경제력이 뒤쳐졌다.

#### (4) 일본의 추격

아시아에서의 현대화 추격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부터 시작됐다. 청나라에 패전은 큰 충격이었는데, 청나라는 1856~60년 2차 아편전쟁 패전 이후부터 중체서용을 내걸고 양무운동을 개시했다. 양무운동은 태평천국을 진압한 지방의 한족 관료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그 내용은 서구 무기를 수입하고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배후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청나라는 1890년대 초까지 대규모 함대를 갖추며 그럭저럭 무력을 증강하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청일전쟁에서 대패하며 그 허술함이 폭로되었다.

중국 현대화의 실패 원인은 무엇보다 변법운동의 실패, 즉 산업화에 적합한 정치체제를 만드는 데 실패한 것이었다. 양무운동은 군수산업 육성을 하면서 동시에 황제 권력 강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황궁은 서태후부터 외척과 환관까지 지대추구 경쟁을 하는 부패의 전당이였다. 무기를 수입한다며 매판적 축재를 하는 것도 비일비재했다. 산업화에 필요한 능력 있는 인재나, 민간과 정부의 효율적 협동 같은 것은 아예 기대하기도 힘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19세기 말 강유위와 광서제가 청일전쟁 패배를 계기로 서양 정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2단계'의 근대화 운동, 변법운동을 추진했다. 모델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이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서태후와 기득권 세력의 반격으로 시행 백일만에 좌절되고 말았다. 그리고 20세기 초 유럽과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되며 중국의 현대화 개혁은 반(半)식민지 상태에서 진행됐다. 중국은 현대화의 타이밍을 놓쳤다.

일본의 경우 막부와 번주들이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보다 더 정열적으로 서구 정세를 수집했다. 청나라가 지배계급의 약화를 두려워해 정보를 숨긴 것과 대조적이었다. 서구에 공포를 느낀 일본 지배계급은 1850년대부터 양무운동과 비슷한 군사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데 일본판 양무운동 와중에 미국 페리에 의해 강제 개항이 이뤄졌고, 미국, 영국, 러시아 등과 연달아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며 막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번주들은 막부의 무능을 공공연하게 비판했고, 사무라이 계급은 서양을 물리치기 위해 천황을 다시 세우자는 존왕양이(尊王攘夷) 운동을 조직했다. 물론 그 명분과 달리 존왕양이 운동의 실제 내용은 막부 타도가 핵심이었다.

지배계급의 분열로 1868년 막부 체제가 타도됐다. 그리고 천황제가 복권됐다. 그런데 이때 천황제는 단순한 왕정복고가 아니었다. 입헌군주제를 향해 나아가는 변곡점이었다. 1868년의 변화가 퇴행이 아니라 진보로 나아갈 수 있었던 원인은 크게 보아 세 가지였다. 첫째, 번주들이 일본식 양무운동으로 1850년대 광범위하게 서유럽 정보를 수입한 것과 촉망받는 젊은 사무라이들을 서유럽으로 유학 보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예로 이 유학생 중 하나가 일본 현대화의 주역이라 할 이토 히로부미였다. 둘째, 사쓰마번과 조슈 번 같은 대형 번들이 메이지유신으로 집권한 이후 퇴행적 권력 쟁투가 아니라 현대화에 매진했다. 그리고 이토와 같은 젊은 세대 혁명가들에게 빠르게 리더십을 이양했다. 셋째, 메이지 천황이 왕권을 고집하지 않았던 덕분에 내전을 피할 수 있었다. 청나라와 조선의 사례를 보면, 왕권을 둘러싼 내전이 현대화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메이지 천황은 청나라의 서태후나 조선의 고종과 달리, 왕권에 집착하지 않고 젊은 세대 리더들에게 힘을 싣고 유신을 뒤에서 지지하며 이끌었다.

평가해보면, 메이지유신은 세계의 현대화 프로그램 중 가장 체계적이었다고 볼 수 있

다. 일본 핵심 엘리트가 총출동해 유럽과 북미를 1년 가까이 사찰할 정도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결과였다. 막번 체제를 타파한 후 폐번치현(廢藩置縣)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와 조세체제를 갖췄고, 내각제, 입헌, 의원제, 정당제 등을 20세기 초까지 차례로 도입했다. 물론 여러 갈등으로 내각이 1~2년 만에 교체되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계속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한쪽 정파가 다른 쪽을 숙청하거나 죽이는 일은 없었다. 심지어 일본 내각은 실직한 사무라이들이 주축이 된 자유민권운동 같은 급진파의 요구도 부분적으로 수용을 했는데, 그 결과 대중적 봉기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 지배계급의 새로운 현대적 동맹이 이렇게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 (5) 시사점

현대로 이행했던 각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① 분권적 권력이 변화를 선택하는 데 유리하다.

구조적 위기 시기에는 기존 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럴 때 폭력이 커진다. 중앙집권적 권력은 폭력을 감축하기 위해 지대를 내주는 데 유리하다. 폭력과 지대의 교환을 통해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고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기가 커질수록 지대에 만족하지 못한 세력은 폭력을 키우고, 이 폭력을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진다.

중국의 사례를 보면 폭력과 지대를 교환하는 데 적합했던 것이 바로 제왕적 권력이었다. 반면, 의회 정치의 확대나 다양한 조직 사이의 협력은 아무래도 폭력과 지대의 교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쪽에 힘을 신게 된다. 이해관계자가 다양할수록 지대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해관계의 조정은 고도의 지적, 도덕적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탐욕, 질투 같은 부정적 감정을 통제한다는 점도 이득이다. 잉글랜드의 경우 일찍부터 발달한 의회 제도와 젠트리로 불린 상인 출신 하층 귀족 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폭력과 지대의 교환은 제왕적 대통령을 중심으로, 80년대까지는 군부와 재벌이, 90년대 이후에는 여기에 특정 지역의 유권자와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까지 더해졌다. 한편,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의회와 정당은 과소발전하고 무능해졌다. 노동운동 역시 노총과 산별노조 같은 계급 내부의 조정기구가 과소발전했다. 한국은 14~18세기 영국보다는 명청 시기 중국의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격인데, 물론 사회의 변화 속도는 그때보다 현재가 수십 배 빠르다.

### ② 올바른 사상으로 정세에 적합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유럽의 부르주아 혁명은 우여곡절 끝에 도달한 것이지 어떤 청사진을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다. 로크만 해도 통치론(정부에 관한 두 논거)을 명예혁명 직후에 썼지 명예혁명을 예상해 쓴 것이 아니었다. 중앙은행 제도도 구상을 먼저 가지고 설계한 게 아니라, 왕이 전쟁을 위해 은행가들과 협상하다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판단들은 결국 전반적으로 타당한 방향의 변화로 이어졌다. 1687년 뉴턴의 프린키피아, 1688년 명예혁명, 1689년 로크의 통치론, 1776년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상적 흐름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사상의 흐름이 인간과 사회에 관한 과학을 추구하며 인간의 인식과 감정을 탐구하고, 법과 정의를 규정하고 적용하는 정부의 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국가의 통치원리를 만드는 학문을 경제학(statecraft)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의 경우 춘추전국 시대부터 유학이 경제학으로 뿌리를 잡았다. 유가의 경제학은 민본(民本)을 기본으로 삼아, 토지 겸병을 위한 패권 전쟁을 지양하고, 백성의 평온을 만드는 왕도(王道)정치를 추구했다. 또한, 중농주의를 토대로 농민에 대한 토지 배분 정책을 강조했다. 중국이 봉건제 선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서유럽보다 수백 년 앞선 유가의 경제학 전통이 있었다. 하지만 유학은 명나라 이후 신유학으로 불리며 경제학에서 과거 준비를 위한 학문으로 타락했고, 이후 유학은 개인의 수양을 위한 학문으로 성격이 변했다. 유학에서 유교로 발전한 이 지적 전통은 점점 더 경제학의 성격을 잃어 버렸는데, 봉건제 쇠퇴기에 서유럽이 오히려 경제학을 발전시킨 반면, 중국은 역으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경제학마저 무시한 것이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포퓰리즘으로 불리는 일련의 정치사상 흐름이 중국의 역설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다. 경제학의 기본은 사회 존속을 위해 인간 감정의 부정적 측면(분노, 질투, 공포 등)을 관리하고, 사회의 풍요를 늘리기 위해 개인적, 사회적 역할을 서로가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과 사회를 둘러싼 조건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걸맞은 제도를 입안할 수 있어야 하는데, 포퓰리즘은 인간 감정의 부정적 측면을 극대화해서 특정 세력이 권력을 잡는 것에 몰두하도록 만든다.

### ③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면서 통치에 필요한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의 봉건제 변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혁명의 감정과 관련이 있다. 프랑스의 혁명은 앞서 봤듯 분노가 반복해서 이어졌다. 로베스피에르, 나폴레옹, 심지어 그의 사촌까지 대중의 이런 감정을 잘 이용했다. 그런데 왕의 목을 베었지만, 왕권은 반복해서 부활했고, 혁명 열정은 공화국의 제도를 만드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영국에서 명예혁명과 뒤이은 개혁이 분노의 조절을 제도적 목표로 삼았던 것과 비교된다. 로크가 명예혁명 직후 통치론에서 보복을 자제하고 징벌을 타당하게 만드는 입법의 중요성과 개인의 권리와 정부의 제한된 역할을 강조했던 반면, 루소의 후예를 자처한 로베스피에르는 분노의 대상이 됐던 왕과 반동분자를 처형하는 데만 집중했다. 그 결과 영국이 명예혁명 이후 큰 쿠데타 없이 정치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반면, 프랑스는 분노와 응징이 한 세기 가까이 반복하는 비극을 겪었다.

들의 차이는 민중봉기와도 관련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상퀼로트의 민중운동에 의해 제1공화정과 제2공화정이 수립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민중이 경세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다는 점이다. 1789년 프랑스혁명의 도착지는 나폴레옹 제1제정이었고, 1848년 2월 혁명의 도착지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제2제정이었다. 1871년 파리의 혁명적 코뮌은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기회주의적 부르주아지의 제3공화정에 프랑스 공화국의 전통을 넘겨주고 말았다. 이렇게 통치를 할 수 있는 인간과 사회에 관한 적합한 과학, 그리고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봉기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프랑스 혁명들의 교훈이라 하겠다.

영국의 경우 크고 작은 투쟁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정부의 전복까지 가지는 않았다. 예로 왕정복고를 노리고 스코틀랜드를 거점으로 삼아 일어난 자코바이트 반란은 스코틀랜드를 잉글랜드 현대화 운동에 복속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스코틀랜드 젠티리의 무시로 큰 희생 없이 진압되었다. 19세기 중반의 차티스트 운동은 계급적 갈등을 투표권으로 전면화한 것이었는데,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제도적 진보를 이루며 19세기 말 보통선거권 쟁취로 이어졌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사회운동들은 질투와 분노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계간 사회진보연대>에서 수차례 다룬 바 있다. 구체적 내용은 생략한다. 이행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프랑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는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회운동이 '경세'를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분노와 질투 같은 부정적 감정은 시민이 건설하는 제도들을 통해 승화되어야 한다.

#### ④ 부패한 엘리트와 적합하지 못한 봉기의 조합이 최악의 퇴행을 만들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이 다른 길을 간 원인은 대략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왕권과 엘리트 세력의 태도가 달랐다. 중국은 서태후로 상징되는 지배 세력이 나라가 몰락하는 그날까지 기득권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반면 일본은 메이지 천황이 현대화를 지원했고, 번주들도 기득권과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 왕의 자질과 신진 리더들의 자질 차이가 두 나라의 미래를 가른 것이다.

둘째, 종교적 농민전쟁의 유무였다. 중국은 아편전쟁 직후 태평천국 농민전쟁이 발발했다. 그런데 기독교적 종말론으로 무장한 농민의 반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방호족의 기득권 권력이 오히려 강해졌다. 태평천국 운동은 패배 이후에 남는 것도 별로 없었는데, 분노와 기득권만 강화한 채 외세의 개입을 불려와 청나라의 이행에 더 큰 짐을 얹었다. 일본의 경우 소규모 농민반란은 여럿 있었지만, 종교적 이념의 대규모 반란은 없었다. 몰락한 사무라이의 운동도 있었지만, 입헌을 가속하는 것을 요구했던 터라 영국적 자유주의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촛불혁명'으로 불리는 탄핵 사태 이후 19세기 말 동아시아의 분기점

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박근혜 탄핵 이후 집권한 민주당 세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비롯한 모든 권력기관을 자신의 수중에 장악하기 위한 권력 쟁투에 집중했다.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들도 촛불시위 이후 현 집권세력과 혼연일체가 되어 합리적 개혁정책이 아니라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반보수 투쟁에 매몰되었다. 이에 반발하는 보수세력은 대규모 촛불시위를 조직해 2016년 광화문 촛불 뒤집기에 나섰다. 2019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진을 두고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보수와 개혁이 동시에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사건도 발발했다.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은 태평천국 농민반란과 서태후의 권력 쟁투로 나라가 풍비박산 난 19세기 말 청나라와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한국 사회는 역사적 분기점에서 퇴행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5. 결론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현대 사회의 치명적 기저질환이 드러났다. 시민들도 대안에 목말라 한다. 하지만 현재 유행하는 대안들은 현대 사회의 치명적 기저질환에 눈을 감는다. 그래서 자칫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대 사회의 결함은 계급사회의 모순, 즉 지배계급이 잉여노동을 충분히 추출하여 착취할 수 있을 때만 그 존속이 보장된다는 점에 있다. 주인-노예, 지주-소작농의 관계가 자본가-노동자의 관계로 바뀌었고, 잉여생산물이 이윤으로 바뀌었지만, 폭력과 지대의 교환으로 지배계급을 유지하며 잉여노동을 착취하는 계급사회의 근본 속성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 사회의 위기는 이윤율 하락으로 나타나는데, 이윤율 하락으로 과잉자본과 과잉인구가 증가하며, 지배계급의 경제적 방종이 커지고 피지배계급의 도덕적 타락과 상대적 빈곤이 심화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한편, 현대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는, 사회주의적 변혁이 여전히 그 방향을 찾고 있지 못한 현재, 봉건제를 변혁한 경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봉건제 변혁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체제의 분권적 권력이 변화를 선택하는 데 유리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개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자운동이 노동조합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지역과 현장에서 많이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미래의 청사진이 아니라 매시기 정세에 적합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판단을 위해서는 시대에 걸맞은 경제학이 필요한데, 필자는 이를 마르크스주의라고 생각한다. 셋째,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면서 통치에 필요한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대중의 정념을 극대화하며 통치역량을 약화하는 현재의 포퓰리즘 정치세력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다섯째, 부패한 엘리트와 적합하지 못한 봉기의 조합이 최악의 퇴행을 만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세력이 이 최악의 조합을 보여준다. 노동자운동이 지적, 도덕적 역량을 시급히 키워 이들을 대체해야 한다.

대안을 특정하기 어려운 오늘날 같은 정세에서는 변화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계급사회의 지양을 추구하는 한국의 노동자운동이 그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노동자운동은 포퓰리즘 정치의 노동운동 버전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주의에 친화적이다. 노동자주의는 임금소득자가 특별한 역사적 지위를 가진다는 전제 위에서, 노동조합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역사적 진보라고 여긴다. 자본가라는 가해자와 노동자라는 피해자의 선악 구도 속에서 노동조합이란 영웅이 악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한다는 메시아주의 레토릭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의 다른 글에서 분석하고 있듯, 오늘날 대기업, 공공부문 기업별 노동조합은 1990년대 이후 오히려 폭력과 지대의 교환 과정에 동참한 광의의 지배계급 동맹에 속해 있다. 노동조합운동은 지대공유 동맹에서 떨어져나와 70%의 나머지 임금소득자와 연대해야 한다. 노동자주의를 노동조합운동 내부에서 혁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이 글에서 마르크스 계급투쟁의 역사법칙을 노스의 “폭력과 사회질서”에 관한 이론으로 보완했다. 사회의 근본 모순과 이행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는 둘의 조합이 설명력을 가진다. 노동자운동이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치체제와 동맹, 특히 이행의 문제를 생각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가시모토 미오, 미야지마 히로시, 『현재를 보는 역사 조선과 명청』, 너머북스, 2014.
- 데이비드 파커 외, 『근대유럽을 만든 좌우의 혁명들, 혁명의 탄생』, 교양인, 2009.
- 모종린, 배리 와인게스트, 『한국발전론』, 서울셀렉션, 2015.
- 백영서 외, 『동아시아 근대이행의 세 갈래』, 창비, 2009.
- 사회진보연대, 『코로나19 사태의 원인과 전망』, 2020.
- 윤소영, 『한국사회성격 논쟁 세미나 I, II』, 공감, 2020.
- 한지원, 「오늘날의 사회주의」, 『2019년 노동운동포럼 자료집』, 사회진보연대, 2019.
- 한지원, 「코로나19 이후 세계: 마르크스주의적 접근법」,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0년 여름호.
- Douglass C. North, John Joseph Wallis, Barry R. Weingast, *Violence and Social Orders: A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rpreting Recorded Human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코로나 위기, 체제에 도전하는 노동자운동의 과제

이소형 | 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장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코로나19 감염병 악재와 겹쳤다. 방역, 고용, 사회 안전망 대책들이 긴급하게 실행되고 있으나, 경제위기는 진행 중이다. 특히 저임금, 비정규직, 영세기업 노동자층의 고용 파탄상황은 이제 만성화되고 있다. 코로나 고용위기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양극화된 노동에서 하위 노동을 대변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상층의 노동을 대표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의 조직이지만, 총연맹의 사회적 협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미조직, 취약노동을 구제하는 계급적 연대는 정세적으로 의미가 크다. 여기서 '민주노총'이란 87년 이후 자주적, 민주적 노조, 즉 한국노총을 제외한 노동조합운동 총체를 의미하며 '총연맹'은 산별노조들이 가입한 행정적 최상위조직을 의미한다.

상반기 코로나 고용위기 노사정 합의는 찬반논란 속에 실패로 끝났고, 민주노총의 안일하고 무기력한 대응은 그야말로 '노동운동의 양극화' 현상이었다. 민주노총의 주력부문인 공공기관과 대기업 정규직이 느끼는 고용불안의 체감도는 취약 노동자층의 절박한 상황이 마치 탄 나라의 이야기처럼 여겨질 정도로 무감했다. 민주노총 내부에도 한계기업의 도산과 폐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투쟁사업장이 속속 발생하고 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고용은 여전히 노조 밖의 노동에 비해서는 안전하다. 민주노총은 총연맹의 노사정 협의에 '해고금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안을 폐기했지만, 민주노총 밖 다수 노동자는 해고되지 않아도 강제적 실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 경제, 사회, 정치 전반이 위기에 빠져있는데 유독 민주노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가 않다. 한국 사회 노동자의 대략 5%에 불과한 민주노총 소속의 고임금, 정규직, 대공장의 조직노동이 코로나 고용파탄에 내몰린 취약한 노동계층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대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경제침체가 K자형 회복 즉 모든 노동자의 소득이 함께 위축됐다가 이후에는 회복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불평등 심화의 경향을 예측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극단적 노동의 격차가 전개될 양상이다. 민주노총은 K자 상승곡선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체제에 도전하는 노동자운동을 조직하자고 주장해왔다. 지금 시점에서 민주노총에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질문과 답이

필요하다. 오늘의 토론을 통해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민주노총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심의 기업별 노조를 극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역사적, 조직적 결합의 문제를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산별노조와 총연맹이 무력화된 현실에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 문제를 관성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전진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치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노동자에게 포퓰리즘은 왜 해악인가, 그리고 포퓰리즘과 단절한 노동자의 정치, 사회운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1990년대 노동자운동의 한계

노동운동을 혁신하자는 주장에는 “기업별 노조 체계 극복과 산별노조·총연맹 강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기업노조의 현장 중심성이 상급 단위들의 모든 권한과 위상을 압도하고 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임금인상이라는 분명한 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경제 최대 성장기인 3저 호황은 생산성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였다. 경제성장률에 한참 미달한 임금인상률을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노조 결성과 투쟁이 조직되었다. 이러한 계급적 대응은 한국경제에서 노동조합운동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던 최초의 계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력의 격차에 따른 임금의 격차가 본격화된 계기가 되었다. 문제는 기업별 노조라는 조직 형태에 있었다. 관변 어용노조의 관행과 전두환 정권의 초기업 노조 봉쇄라는 억압으로, 민주노조는 처음부터 기업별 노조 체계를 근간으로 삼게 되었다. 이것은 의도하지 않은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자본의 지불 능력 차이에 따라 노조의 조직률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대기업노조의 임금인상이 중소기업노조에 영향을 미치는 연대 지향적 임금 투쟁의 효과가 소멸하기 시작했다. 호황의 거품이 꺼지고 이윤율이 하락한 시점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중화학 공업 수출둔화로 인해 무역적자와 이윤율 저하가 계속되었으나 재벌들은 금융개방에 따라 해외차입을 늘리고 문어발식 투자범위를 확대해갔다. 이때부터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에도 영향을 끼쳤다. 임금인상에 대한 자본의 대응은 기업 외부 노동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임금인상률이 높은 대기업은 자본 집약적 투자와 아웃소싱을 늘리고, 직접고용을 줄이면서 간접고용을 확대했다. 중소기업은 노동집약적 공정과 대기업 하청으로 편입하게 된다. 재벌 대기업노조의 가파른 임금인상에 대응해 자본은 노동절약적 기술을 대거 도입했고 중소기업으로 원하청 체계를 발전시켜 분업구조를 형성하였다.

1996년부터는 재벌들의 단기외채가 폭증하고 외환보유고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기업들이 부도에 이르렀다. 그런데 1990~96년의 경제 변화의 과정에서 기업별 노조의 임금인상은 정세와 무관하게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 자본은 노조의 전투적 경제투쟁을 일정 수용하는 대신 위기에 대응해 재벌체제 중심의 수직하청구조를 완성했고, 금융세계화에 대비하는 자본 운동의 구조적 재편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1990년대 노조의 투쟁은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확대하여 자본축적방식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지만 계급 내 격차의 축소보다는 각개전투에 집중함으로써 정부정책과 자본의 변화에 조금도 개입하지 못하였다. 초기업 노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던 당시 상황에서 대기업의 임금인상 효과는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쳤고, 자본의 구조변화는 노동운동의 쟁점이 되지 못했다. 대기업노조가 스스로 상대하는 자본의 변화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

물론 이 시점에도 계급적 단결을 위한 시도가 계속되었다. 1990년 전노협의 발족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가 함께 결집하려는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만약, 전노협이 대기업노조가 참여한 조직으로 힘있게 건설될 수 있었다면 노동자운동은 새로운 정세를 열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계급적 단결은 정권과 자본의 필사적 탄압으로 저지되었다. 노태우 정권은 전노협과 대기업연대회의(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회의)의 공동투쟁을 강경하게 진압했고 현장에서의 무자비한 공권력 침탈과 조직 와해 공작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민주노조는 극심한 탄압을 뚫고 연대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당시 정치적, 조직적 열세로 결국 대기업노조가 전노협에 결합하려는 노력은 좌초되었다.

87년 호황기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생산성에 미달한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별 노조를 결성했고 임금인상을 목표로 대중적으로 성장해왔다. 개별 사업장의 시야에서는 당시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인식하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지만, 경제성장기에 시작된 노조의 임금인상 투쟁은 전투성이 강한 만큼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1990년대 기업별 노조 운동은 임금인상 투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자본의 체계적 대응과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기업별 노조 운동이 임금인상을 지속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과 임금의 격차를 고착화해 결국 중소기업노조는 전노협과 함께 쇠락하게 되었다. 재벌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노동조합만이 1995년 민주노총 출범을 통해 힘을 보존했다.

## 민주노총 운동의 결함

민주노총이 걸어온 지난 25년은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에 따라 한국경제도 급격하게 변모한 시기였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IMF 프로그램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가 대대적으로 변화하였고 금융 세계화에 편입한 한국경제는 세계적 차원의 변동에 따라 반복적 위기를 맞이했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었지만 민주노총의 운동은 과거 90년 대 기업별 노조 운동의 경제학적 무지와 사업장 내부에만 갇힌 시야를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지 못했다.

당연히도 1987년 경제성장 시기의 기업별 투쟁의 성공사례가 1995년 이후의 민주노총 투쟁의 전례가 되는 것은 맞지 않았다. 경제성장기 노조는 조직력과 투쟁에 따라 생산성만큼 임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체제의 구조적 위기에 따른 장기적 경제위기의 상황에서는 기존과 같은 투쟁으로는 임금인상도 고용안정도 지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은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노조와 타협하기보다 실업을 확산하여 임금을 억제한다. 노동자가 각자도생의 경쟁으로 밀려나면 자본은 이들을 각개격파한다. 기업별 투쟁은 물론이거니와 산업적 대응도 한계적이다.

총연맹이라는 노동조합의 최상층조직은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거시적 경제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이 조직은 경제위기 시기 각개격파된 노동자를 모으고 계급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총연맹은 자본의 운동을 비판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물론 개별 사업장을 넘어 총연맹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적 힘이 모여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단순히 총연맹이 투쟁을 조직하는 것만으로 거시경제의 변수가 되지 못한다.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경제, 산업정책에 대해 총연맹 스스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국민경제의 고용과 실업에 대한 통제,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역사에서 총연맹이 이러한 역량을 발휘한 적은 없다. 1998년, 2008~09년의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계기였지만 실패로 평가할 수 있다. 1998년은 국가 부도의 위기에 직면해 정부와 자본이 강행한 정리해고, 파견제 법제화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라도 경제·고용정책에 있어 총노동을 관장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했다. 그러나 총연맹은 반복적인 총파업 선언과 노사정위 참가와 탈퇴를 반복하는 것에 그쳤다.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개된 민주노총의 투쟁 중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의 사례를 보면 민주노총이 위기 대응에 어떤 공백이 있었는가를 평가해볼 수 있다. 당시 사회적 파장이 컸던 이 두 투쟁 이후 자본과 정부는 구조조정 양상을 변화시켰다. 정리해고 투쟁의 격렬함에 부담을 느낀 자본은 대규모 정리해고 대신 비정규직(하청) 우선 해고와 명예퇴직을 통한 고용조정을 선호했고, 정부는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한계기업의 생존과 소속 정규직 노동자의 상대적 고임금을 보장하는 타협을 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자본의 대응방식은 금융위기 이후 “소리 없는 해고”의 확대로 이어졌다. 대우조선, 한국GM과 같은 대기업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대량해고를 모면했던 반면, 중소기업과 사내 하청 등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해졌다. 당시에도 총연맹은 개별기업별 투쟁을 지원하는 데에만 역량을 집중했고, 불황이라는 거시경제 조건에서 노동자 내부의 임금과 고용의 격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에 대해 답하지 못했다.

이 두 번의 시기에서 총연맹은 국민경제 전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거나, 노동시장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고 기업별 노조의 대응을 지원하는 기능만 강화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총연맹은 고용위기에 대한 적절한 의제를 제시하거나 총고용정책을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대신 개별기업별 투쟁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앞으로도 총연맹이 경제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미조직, 취약노동에 대한 계급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두 가지에서다. 첫 번째로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다 보니 구조조정, 고용위기 등의 현상을 대처하는 것에 있어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개별적 기업 단위의 고용안정 투쟁에만 집착했을 뿐, 장기적으로 자본의 상황과 노동의 주체적 상황에 맞게 총연맹의 고유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87년 이후, 민주노총의 기반이 되어온 기업별 노조의 교섭과 투쟁 중심성이 노동 내부의 격차를 키우는 핵심적 원인이라는 문제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기업별 노조 극복은 여러 혁신과제 중 일부분이었을 뿐, 이를 넘어서지 못하면 총연맹이 유명무실화된다는 적극적인 위기의식이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민주노총은 노동자 계급 전체의 보편적 이익보다,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들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 기업별 노조, 전투적 경제주의의 폐단

오늘날 공공기관과 재벌 대기업노조는 재벌이 누리는 지대를 공유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민주노총 운동 전반이 고임금극대화 전략을 뒤쫓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별 노조의 특권은 핵심적으로 고임금 문제이다. 기업노조는 조직된 힘을 기업 내 노사관계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생산성 임금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고임금을 유지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 등 수출 대기업의 높은 생산력으로 고임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 노조들은 기업별 체계를 강력하게 고수하며 “노조 인센티브”를 누리고 있다.

2015년 현대차 노조 정규직의 임금은 한국 자동차 산업 평균임금의 2.2배에 도달했다. 이는 취업자 1인당 GDP와도 1.7배의 차이가 나는데, 현대차와 생산성이 비슷한 이탈리아,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보다 훨씬 큰 격차이다. 대기업 고임금이 국민경제 일반의 생산성 수준을 지나치게 넘어선 현상은 비단 현대차노조뿐만 아니라 대기업, 공공기관 노조 일반에서도 나타난다. 2018년 경사노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은 1인당 GDP의 1.91배로 미국과 일본보다도 높다. 대기업의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제조업 대기업은 자본투자를 절약할 수 있는 저임금 영역을 활용

###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의 임금격차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자동차산업 1인당 인건비(FTE) (A)	57	79	83
취업자 1인당 GDP (B)	75	109	107
1인당 인건비 (현대차, 피아트, 르노) (C)	128	134	123
C/A	2.2	1.7	1.5
C/B	1.7	1.2	1.1

(2015년, 구매력 평가, 천 달러, 출처: 노동자운동연구소)

하면서 고생산성을 유지하고 대기업 노조는 고임금 프리미엄을 누리며 재벌의 지대를 공유한다. 한편 공공기관 노조 역시 국가정책과 정부방침이 보장하는 독점 이익에 대해 연공급 임금체제로 고임금 지대공유를 지속하고 있다.

노동자 평균임금을 한참 초과한 고임금을 총연맹이나 산별노조가 공론화조차 하지 못한다. 대기업노조의 단체협약을 상층에 보고하는 체계는 허술하여 사업장 단위의 임금총액에 대해 산별노조와 총연맹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업별 노조의 특권은 민주노총에서 비판받기보다는 오히려 '전투적 투쟁성'의 전형으로 인식된다. 재벌 대기업,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을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의 기준으로 삼아 임금극대화 전략을 목표로 전투적 투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지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에서도 공공기관의 고임금 수준을 추격하는 임금체계 요구가 쟁점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고용유지조치 어려운 비정규직 사업장에서도 그대로 답습된다. 전투적 경제주의 투쟁의 논리는 사용자가 독식한 이윤을 환수하면 고임금 극대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고 노동조합은 임금과 고용의 최대치를 요구하고 수용이 될 때까지 강경한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 민주노조는 사용자가 독식한 이득에 대해 정당한 분배를 쟁취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도 타당하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현대차 노조가 전체 노동자의 평균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을 받고 있다면, 이는 국민경제에서 누군가의 몫을 노조의 힘으로 독식한 결과가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불평등의 원천이 아닌가.

민주노총의 임금투쟁에 대한 관점이 여전히 선진국 최고 수준의 임금 격차와 극심한 일자리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객관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현실적 조건에서 대기업, 공공부문의 임금이 모든 노동자의 평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별 체계로 전개되는 투쟁에서 전체 경제적, 사회적 시각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문제는 다시 기업별 노조 체계인데, 해결책이 있을까?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의 규약으로 기업별 노조 교섭권을 중앙으로 집중하는 방법이 있다. 사실 민주노총이 20년 넘게 추구해온 방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십수 년 동안 증명하고 있듯, 기업노조가 상당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를 산별노조의 대의로 설득하지 못한다. 기업노조 사용자 입장도 있는데 산별교섭을 해도 어차피 기업별 교섭에서 추가적 임금상승이나 쟁의가 가능해지는 구조에서 이중적 교섭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산별노조 조합원 다수가 대기업노조 소속인 상황에서 규약 변경조차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상급단위의 규약을 통한 강제가 아니라면 민주노총의 신규 조직을 대폭 확대해 기업별 교섭 단위의 영향력을 과소화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다. 2000년대 민주노총 전략조직사업의 목표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었다. 공급사슬을 분석해 자본과의 교섭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을 조직하려 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노동자를 조직하기도 했다. 여기에도 한계가 있었는데 기업별 교섭으로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강한 동인이 작동해야만 조직의 양적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기업별 임금 인상이 가능한 곳에서만 노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전반의 체질이 바뀔 만큼 대규모 조직화는 여전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운동적 방식이 불가능하다면 노조법상의 제도변화도 고민해볼 수 있다. 독일처럼 단협 체결권이 산별노조에만 존재하는 제도가 있지만, 우리의 실정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기업별 단체협약 관행이 수십 년간 굳어진 상황에서 법으로 기업노조를 금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기업별 노조가 사라진다고 자동으로 산별노조가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또 민주노총이 기업노조를 규제하려 했을 때,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수단을 통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면 상급조직은 이를 막을 도리가 없다. 결국은 대기업노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산별노조나 총연맹이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현재로서는 민주노총의 모든 시도와 노력이 현실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기업별 노조의 경제적 실리주의를 제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총연맹 조직의 위상과 역량, 모든 것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 총연맹의 힘, 무엇이 남았나

계급을 대표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총연맹의 지도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각 정파는 노선적 개입을 통해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실행해왔다. 국민파는 총연맹의 사회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노사정 교섭을 강조했고, 중앙파는 기업별 노조를 극복하는 산별노조 완성과 진보정치의 강화를 주장했다. 또한 현장파는 전투적 투쟁성을 강조하며 총연맹이 총파업 투쟁의 지도부의 역할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한편에서는 민주노총의 대중적 질서를 이른바 '자민통' 노선을 따르는 퇴행적 경향으로 조직하려는 전국회의류의 정파노조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노선적 개입들은 현실적으로 민주노총과 총연맹 혁신의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국민파와 중앙파는 총연맹과 산별노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모두 유럽형 사민주의 모델을 기반으로 노동조합이 사회적 타협체제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제기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 조합주의나 산별노조-진보정당은 코퍼러티즘의 실질적 조건인 강력하고 중앙집중적 노조, 계급 내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조직적 여건이 갖춰져야 자본과 국가의 힘에 대항하는 교섭, 투쟁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총연맹과 산별노조의 지도력이 없으므로 실현도 어렵다.

현장파의 총파업론은 문제를 더욱 미궁으로 빠뜨린다. 1996~19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을 경험 이후, 민주노총의 전투적 투쟁성이 총체적으로 응집해 계급적 단결을 실행할 수 있는 유력한 경로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상,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위력을 활용하는 것에서조차 실패하고 있다. 기업별 임단투와 산별 투쟁이 총연맹의 구심력을 통해 조정되거나 정세에서 필요한 정치적 공동투쟁에 조직적 합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연맹은 정세 대응을 위해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지만, 현안 사업장들의 시기 집중 공동투쟁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총파업 투쟁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민주노총의 계급 대표성의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더 나아가 사실 이런 노선들은 현실적인 문제 이전에 기업별 노조 체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노동조합의 핵심기능이 사업장이나 산업체계 내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노동자 대중의 파편화된 이해와 요구를 제각각 충족시키는 활동에 머물 것이고 그 결과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세력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자가 사업장을 넘어서서 산별노조로, 총연맹으로 단결의 힘을 모아가야 한다는 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다. 역사적으로 총연맹이 강화론의 원칙과 상반되게 현존하는 모든 노동조합운동은 경제적 실리주의, 노동자주의로 퇴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위기의 상황에서 총연맹의 교섭과 투쟁의 역할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현재 총연맹이 어떤 힘과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원론적이고 당위적인 수준 이상의 내용이 없다. 가령 총연맹 주최 집회 일정에 가맹·산하 조직이 얼마나 동원하느냐의 문제, 직선제 도입 이후 총연맹이 전체 조합원 현황을 관장하는 문제 이외에 민주노총이 가맹, 산하조직의 조직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별 임금과 고용을 방어하는 교섭권은 산별 중앙으로도 실질적으로 위임되지 못한다. 단체협약의 적용 역시 개별 기업으로부터 확대되는 것은 어렵다. 다만 민주노총이 조합원 대중에게 표상되는 정체성이 있다면 기업별 투쟁의 비타협적인 전투성을 보증하는 '네임 벨류'일 것이다. 기업별 끝장 투쟁으로 공식화된 전투적 조합주의의 강력한 영향 아래 총연맹이라는 구조가 실리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기업별 노조와 산별 체계를 총괄하는 민주노총이 어떤 교섭권을 가져야 하는가이다. 기존의 조직구조의 관성대로라면 총연맹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대표하지만 어떤 자본과 정권과도 협상할 수 없는 허수아비일 뿐이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실패한 이후 총연맹은 정세에 필요한 현안들에 대한 노정, 노사정 협의를 관장할 수 있는 동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다. 사회적인 교섭 과정 자체를 총연맹이

관장할 수 없게 되자, 산하·산별 조직들은 각자의 필요로 실용적 대응을 하고 있고 이는 조직 내적으로 합의, 소통되지 않은 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대화 찬반 논쟁이 일말의 의미가 없는 퇴보였다는 방증이다.

## 왜 포퓰리즘을 비판해야 하나?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는 진보개혁진영은 문재인인의 포퓰리즘 정치의 지지기반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독자적인 비판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 노동조합운동이 스스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비판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왜, 무엇 때문에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것인지 아직 노동자운동은 진중하게 토론해 오지 못했다. 오늘의 논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정치비판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포퓰리즘은 노동자가 지향하는 변혁적 정치이념과 명확히 다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사회질서의 구조적 변화가 아니라, 단기간의 인기 영합을 위해 대중의 즉흥적 감정을 조장하는 정치행태이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노동이라는 자본주의 구조를 비판하는 사회주의적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면, 포퓰리즘은 선심성 현금 살포를 통해 임금노동체계를 부정하고 단기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이다. 한국사회의 포퓰리즘은 386 세대에 의해 진보주의로 포장되어 노동자운동을 포섭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강화,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사법 방해 등 포퓰리즘 정치를 통해 체제의 최소한의 민주성마저 퇴행시키고 있다. 자유주의에 훨씬 미달하는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이념적 결함과 자본주의 경제 근간의 작동원리에 대한 경제학적 무지는 각종 제도와 정책에서 일관성 없고 단기적인 대책을 쏟아내 해당 주체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촉발한다. 집권세력의 포퓰리즘은 사회를 끝없이 보수/개혁의 진영논리로 나누고 이익추구와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끊임없이 지지층을 결집해 지지율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진보, 정의, 개혁, 공정함”과 같은 보편적 시민의식은 혼란에 빠져있다.

포퓰리즘에 가장 취약하고 불리한 집단은 노동자들이다. 포퓰리즘이 나누는 선악의 기준은 옳고 그름과 같은 정의의 가치가 아니라 소위 목소리가 큰 집단, 사회적 영향력이 큰 세력의 지지 여부다. 따라서 노동자가 노조를 통해 사회구조의 부당한 모순을 정당하게 제기한다 해도 이러한 목소리는 정치적 손익 계산에 따라 언제든지 배제될 수도,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스스로 경제적 이익집단으로 전략하여 여타의 세력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 이 시각에도 반복되고 있다.

## 정치 위기와 노동자의 이익집단화

노동조합 운동이 자본주의적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한 비판을 포기하는 순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으로 전락한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의 대표적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찬동하며 최저임금 만 원 요구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또 공약 1호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정책에 조용하여 '제대로 된 정규직화' 투쟁을 이어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보수세력보다 상대적으로 선의의 개혁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임금과 비정규직, 실업 문제 그 무엇도 개선되지 못했다. 노동자와 자영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 사이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결정의 근간이 되어야 할 한국 경제의 저성장-인구감소라는 경제위기, 노동시장 양극화와 저임금 구조가 작동하는 자본과 노동의 구조적 특성, 비정규직은 왜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단기적으로 충족할 만한 정책으로 지지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노동조합이 경제적 실리를 관철하려는 이익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이다. 2000년대 민주노총이 저임금과 불완전 취업 노동자의 고통을 대변해 투쟁해온 비정규직 운동은 개별 사업장의 현안을 넘어서는 경제 구조적인 문제로 노동자운동이 체제를 비판하는 사회적, 정치적 의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 의제를 수용해서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실적 위주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조합은 이 문제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라는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개별 사업장 투쟁을 통해 최대치의 이익을 얻으려는 조합주의적 대응에 매몰된 것이다.

노동자운동이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치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단호히 분별 정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진보'로 간주하는 관성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범진보, 개혁진영과의 정치적 연대를 실용적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이나 야권연대와 같은 정치방침을 통해 기업별 노조의 실리적 경제투쟁과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범진보 운동의 일부로 조직해왔다. 사업장에 갇힌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 정치적 비판의식이 없어도 기업으로부터 요구를 관철하는 투쟁을 할 수 있었다. 이 역시 민주노총 운동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전투적 경제주의적 경향은 반보수포퓰리즘 개혁 의제들을 활용한다. 이제 공공성이나 노동 개혁, 민주주의와 같은 진보적 의제들은 최대치의 경제이익을 요구하는 투쟁의 지렛대가 되기도 한다. 최저임금인상이나 정규직화 정책, 공공의료 정책과 같은 포퓰리즘적 정책들에 대해 운동진영은 이 정책들의 경제적, 역사적 맥락에서의 실효성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가능성 유무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선한 의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추상적 연사의 포퓰리즘 진보개혁 의제들은 개별 노동조합의 현안 투쟁의 명분과 목표가 된다.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없으니 노

동조합 운동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구별되지 못하기도 한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쟁취하는 투쟁의 방향은 포퓰리즘 정책을 더 왼쪽으로 급진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현실적 개혁 방향이다. 그러나 진보로 위장한 각종 의제에 대해 노동조합이 이익추구 집단에 머물러 있다면 다른 개혁의 방향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장 내 경제투쟁에 가로막힌 계급적인 정치지향에 기반해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일이다.

## 반-포퓰리즘 투쟁, 어디에서 어떻게?

오늘날의 주류 사회운동은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비판기능을 상실했다. 민주노총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보수, 개혁 세력의 일원으로 주류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입장에 부화뇌동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운동진영은 박근혜 촛불집회 때의 적폐청산이라는 낡은 구도를 여전히 진보의 출발점으로 인식한다. 문재인 집권 3년이란 시간동안 민주노총은 대통령권력의 비대화, 행정부의 권력독점, 집권세력의 사익추구(부패비리), 의회주의와 법치의 파괴에 대해 전혀 비판하지 못했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사업 방향에는 반보수 개혁진영의 정치적 요구를 관성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검찰개혁을 필두로 한 개혁 이슈들에 대한 인식은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 내에서 최소한의 정치토론조차 진행되지 못한다.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치에 대해 노동조합이 비판적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정치적 입장을 세울 때 참여연대나 민변과 같은 주류 시민운동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입하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검찰개혁, 권력 측근의 비리 의혹, ‘역사보안법’, 강제 징용, 위안부 배상 운동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 주류 시민운동의 담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운동 스스로 역사를 인식하고 지식을 학습하며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의 결과로 청년세대 집단들이 소위 “공정성”을 제기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 조국 사태 당시 자녀 입시 비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나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 즉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중단하라는 취업준비생들의 청와대 청원 논란, 그리고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은 기회의 평등, 공정/불공정의 쟁점을 제기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나 진보진영은 문재인 정부의 시각을 공유하며 정부의 피아 구분선을 따랐다. 즉 친정부적 입장과 반정부적 입장 간 진영 논리에 스스로 휘말리면서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지 못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이나 의사파업에서, 민주노총을 포함한 진보진영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에 찬동했다. 물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노동자나 의사가 제기한 공정과 평등은 매우 협소한 시야에 갇힌 것이었고, 결국 자신의 손익 문제를 따진 결과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노동자운동이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보수세력의 정치공세로 규정하거나, 또는 사회의식이 부족한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는 한, 진보개혁의 진영논리에 갇혀, 비판적 사고가 멈추게 된다. 문재인 정권 개혁에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는 환상을 고수한다면, 사태의 돌파구를 열 새로운 대안을 찾을 노력을 방기하게 된다. 공공부문의 제한된 일자리 경쟁이 노동의 양극화에 있는 문제라면, 한국사회 최고의 임금과 고용을 보장받고 있는 민주노총 주력의 기업노조는 인국공 사태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하는가? 절체절명의 코로나 2차 대유행 국면에서 지지율을 높이려 공공의료를 앞세워,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는 정책으로 의사집단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정부의 무책임성을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하지 않는가?

나아가 한국 사회 경제, 정치 사회 질서는 누구에게 유리하게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가?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누구의 주도로 해결되어야 하는가? 사업장을 넘어선 정치적, 사회적 투쟁은 왜 민주당과 구별되지 않는 '촛불 항쟁'으로 수렴되고 말았는가? 노동조합운동이 포퓰리즘에서 분리되려면, 노동자 스스로 정세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회구조를 올바르게 비판을 하기 위한 지적, 윤리적 질문들이 필요하다.

## 체제에 도전하는 노동자운동, 연대임금-연대고용

구조적 위기의 시기, 노동조합은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 사회를 지향하는 이념적 요소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 노동조합이 변혁의 이념적 지향을 실현하는 유력한 경로로 연대임금-연대고용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것이 노동자의 임금 양보, 정규직 희생강요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임금 격차를 줄이는 합리적인 해법 수준 정도에서, 고임금 노동자의 도덕적 양심을 촉구하고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단기적으로 구제하는 정책 정도로 연대임금을 사고한다면 이러한 비판은 일견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노동조합운동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 생산관계 변혁의 구체적인 난제는 생산과 분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생산력 격차에 따른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노동자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행의 첫 번째 관문일 수밖에 없다. 주지하듯이 지금은 자본 스스로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최종적 위기의 시간이다. 자본주의의 취약한 모순에 대해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시기라는 뜻이다. 노조라는 경제적 조직이 변혁을 위해 수행하는 특수한 실천방식으로 연대임금, 연대고용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대임금은 아름다운 이상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계급투쟁 중 하나의 방법이다. 가령 노조가 연대임금을 통해 원하청 간의 생산성 격차에 따른 임금 격차를 축소한다면, 자본이 하청기업의 저생산성을 해결할 방법을 찾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인 힘으로 작동하여 자본이 하청기업에 대해 저임금 단가 경쟁이 아닌 다른 선택

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또 공공기관 고임금 임금체계를 변화시키는 노조의 연대임금은 실업난 속에서 국가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정책을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인 힘이 된다. 이러한 시도들은 체제의 위기를 인식하고 대안적 사회를 준비하는 노동자 계급의 부단한 혁명적 노력이다.

그러나 연대임금-연대고용이 의미가 있다고 해도 누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정치, 사회문제를 비판하는 노동자의 시민적 의식이나, 변혁적인 지향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경제적 사익추구 집단에서 과감히 벗어나, 사회변화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노동조합 활동 속에서, 정확히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개별 사업장에서 노조를 결성해 임금투쟁을 하는 이유는 회사의 이윤을 다수의 노동자가 공동으로 생산했다는 상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노조는 회사에 정당한 이윤 분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성별, 직종별, 업무별로 다양한 기여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항하는 강력한 힘을 모으기 위해 공동요구와 공동투쟁을 조직한다. 연대임금 연대고용은 이러한 민주노조의 경험을 국민경제 차원으로 확대해서 생각해보자는 뜻이다. 즉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부와 축적에 국민경제에 참가한 모든 노동자가 공동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별로 존재하는 생산성 격차, 특히 저생산 기업의 존재를 묵인하며 저임금 노동자가 확대되는 현상을 방조한다던가, 반대로 고생산성 부문이 격차 이상의 임금(지대)을 받아 계급 내부의 격차를 스스로 극대화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지금 시기 연대임금은 재벌 대기업, 공기업 노조를 비롯한 기업별 노조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업별 노조의 임금극대화 전략은 산별노조와 총연맹의 중앙교섭을 통해 폐기되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제조업의 산업적 평균임금을 중심으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할 수 있다. 제조업 장시간 노동에 대한 임금체계 중 수당, 성과급 체계가 기업별 편차에 따른 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별노조가 기업별 노조의 임금총액을 관장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임금체계를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매개로 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거나, 각종 수당과 성과급의 지급방식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정규직의 연공급체계가 현재의 저성장, 저인구 시대에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조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속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는 연공급 커브, 피라미드식 임금형태가 공공부문 평균 임금체계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산별노조 내에서 충분히 합의된다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있어 연공급 임금체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산별노조가 주도하는 초기업적 표준임금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 연대임금에 대한 조직적인 합의, 공동의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체계가 임단협의 문제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조합원들과 함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노조에는 경제위기 시기 고용을 둘러싼 노동자 내부 갈등을 조정하고 보편적 고용 기준을 확립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과제가 있다. 건설업의 도급과 임시고용 구조는 고용 그 자체에 대한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극대화한다.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부문에서는 도급(성과급) 제도를 통해 노동력 지출을 극단까지 밀어붙이고(실질적 포섭), 노조로 조직된 부문에서는 고용기회를 두고 노동자 간 경쟁(형식적 포섭)이 분출한다.

건설산업이 경기순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격이 있다고 하여도 건설업 자체가 노동력의 집중적인 투입이 감소하는 성숙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건설 수요는 기본적으로 다른 산업의 영향을 받는 파생수요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성장 국면에서 고용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노조가 현재 포괄하고 있는 노동자의 고용기회 확대만을 사고한다면 산업적 차원의 노동력 공급을 관장하는 힘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직종과 건설업 전체의 조직화를 목표로 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포괄 조합원 및 직종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극복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연대임금의 노력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고용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대량실업에 대응하는 노동자 계급의 요구는 전 산업적 고용안정을 목표하는 거시경제 정책에 있다. 총연맹과 산별노조가 사회적 협의를 통해 수행해야 할 일이다. 특히 총연맹이 경제학적 지식을 통해 새로 혁신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 코로나 위기, 총연맹 운동의 지향

코로나 고용위기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역할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왜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앞서 제기한 두 가지의 쟁점, 민주노총의 기업별 노조와 총연맹의 난점, 그리고 포퓰리즘으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자운동의 정치지향이라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않는 한 앞으로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노조의 계급적 단결의 노력이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거대한 정치, 사회운동의 출발지점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다.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는 현실의 난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민주노총과 총연맹이 혁신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먼저 민주노총의 정치적, 경제적 지향을 조직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세력 및 주류 시민사회단체들의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단호한 비판과 정세 토론이 동반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및 산별노조 강령을 화두로 하여 노동자운동의 변혁적 세계관에 대한 대중적 토론을 준비하자.

둘째,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이행과정을 의미하는 노동조합의 연대임금, 연대고용 전략을 전면화하자. 기업별 노조의 임금체계 문제에 대한 조직적,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총연맹과 산별노조로 임금교섭의 권한을 확대하고 기업별 노조의 교섭 권한을 제한하는 구조적,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자.

셋째, 총연맹의 정책, 교육 역량을 새롭게 강화해야 한다. 총연맹 스스로 사회적 총자본의 운동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질서를 인식하고 경제학적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국민경제의 거시적 지표와 재정·고용정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연대임금과 연대고용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생산하고, 기업과 산업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중앙교섭의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 체제에 도전하는

##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문

김금철 |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 1)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정세, 민주노총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실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민주노총 직선제 2기 지도부의 현재 결과는 1년 차 2018년 정기 대의원대회 때부터 예상되어온 것이었다. 노동자 운동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결정사항들을 아래에서부터의 토론과 논의 없이, 대의원대회 → 중앙위원회 → 중앙집행위원회로 위임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는 내부 소통과 민주적 의견수렴을 중시하는 민주노총의 사업 기풍을 무시하는 행태로 비춰졌다. 또한 사업의 공정, 조합원에 대한 홍보, 토론을 중시하는 노동조합의 특성을 배제한 것이었다. 민주노총 전체가 토론해야 할 과제가 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고, 상층의 사업으로 전락해 버렸다.

직선제 2기 지도부가 제안한 코로나 19 대응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그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다. 대기업/공공부문의 노동자나 강력한 노동조합을 가진 노동자들은 위기를 회피 또는 지연시킬 수 있었지만, 저임금/비정규직/비노동조합 노동자들은 생계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단이 없었다. 특히 특수고용 대면 노동자(방과후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학원버스 기사등) 관광산업노동자 등은 생계를 보조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유무급 휴직과 구조조정을 앞에 두고 있는, 노동조합으로 포괄되지 못한 노동자들을 고려하면 집행부의 선의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제의되었다고 생각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4월 16일 20-5차 중집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었으며, 7월 1일 중집에서 '다수의 반대의견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집행부는 중요한 결정사항을 위원장의 판단으로 온라인 찬반투표 대의원대회로 넘겼고, 이는 현재 집행부 사퇴와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 하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내용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사회적 대화의 추진 과정이 조합원의 신뢰를 모으고, 단결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식적인 논의체계들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합의하는 과정이 생략되었고, 중집에서의 진통과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야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필요한 수많은 준비 과정들이 생략된 상황에서 소수의 상층 집행부들만의 결정사항으로 변질되었다. 유럽 등 다른 나라

의 총연맹에서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합의를 한다고 하니, ‘남들이 장날 장에 간다 하니 준비 없이 거름지고 장에 간 꼴’이 되어버렸다.

노동조합으로 포괄하지 못한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민주노총이 한국 사회 전체 노동자 계급의 대표조직으로서 위상을 갖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다. 다만 노동자 운동의 역사와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유럽과 같은 사회적 대화의 사례를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다. 이번 사회적 대화가 파국으로 치달은 원인을 분석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한편 민주노총의 문화를 지적할 수 있다. 투쟁을 할 때에는 동지이지만, 사회적 대화를 결정하는 중립 자리에서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며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했다.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 의견이 다른 세력들이 노사교섭을 하듯이 서로 적대시하는 것은, 이후 노동자운동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후 사회적 대화가 진행된다면 노사 / 노정 / 노사정 등 교섭의 명확한 위상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동의와 설득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한편 역사적으로 사회적 대화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했던 경험만으로, 사회적 대화 자체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논리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 2)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 노동자운동, 지난 역사와 이념, 조직구조에는 문제가 없었나?

건설노동자들의 경우 IMF와 이후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 개편을 조직화의 기회로 삼았다. 불안정 노동의 경향이 심해지고 실질적인 소득과 임금이 하락하면서, 불만을 조직화했다. 1990년 중후반부터 특수고용노동자가 된 레미콘 노동자들이 2000년 조직되었고, 덤프 노동자들이 2004년 조직되었다. IMF 이후 실질적인 임금이 하락하며 그 불만을 조직해 타워크레인노동자들을 조직했다. 플랜트 역시 비슷한 상황. 위기를 겪고 새로운 노동형태가 만들어지며 조직확대의 계기로 삼기도 한다. 다른 산별노조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조직화 사례가 있다.

한편 위기를 겪는 기존의 노동조합들은 자신들의 고용과 임금을 지키기 위한 기업별 투쟁을 활발히 벌였다. 그렇지만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을 분할하며 기존 노동조합의 노동조건을 인정하는 대신, 사회적으로는 노동 유연화와 노동조건 하락을 유도하였다. 기존 노동조합은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기도 하였다.

이는 각 기업별 노동조합이 생기며 산업별연맹과 총연맹을 구성한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 여전히 기업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 활동의 영향이 크다. 각 기업/단사/현장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투쟁이 최선이라는 인식이 있다. 전체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제도나 산별/지역별/대정부 교섭과 같은 형태의 활동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경향도 있었다. 산별노조와 총연맹, 지역본부 등 상급단체라고 하는 노동조합 조직들이 단순히 각 단사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조직된 노동자와 미조직된 노동자가

지 포괄하는 교섭형태의 마련, 정책 대안 마련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기업별 교섭과 투쟁, 임금과 고용의 격차 속에 경제적 실리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상시적인 고용이 없는 건설노동자들은 직종별 지역별 임금이나 고용안정성의 차이가 크다. 임금교섭의 조건, 법제도적 완전성, 노동조합의 역사 등도 각 직종의 노동조건에 차이를 준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 공동교섭 공동투쟁과 같은 방식으로, 전체 직종 조합원들이 현장에 고용되고, 노동조건을 함께 상승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현하고 있다. 또한 현재 소산별 연맹 체계로 있는 건설산업연맹을 단일 대산별 노조로 만들고, 이를 통해 대정부 대자본 교섭력을 키워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의 사례와 같이 현재는 상시적인 고용형태, 정규직들이 노동의 표준 형태가 아니다. 다양한 형태의 노동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기존에 투쟁으로 만들어왔던 노동조건 의 향상은 후세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물론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등 엄혹한 시기에 노동자 운동을 통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상승시켜온 기성 조합원들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세대들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고 있다. 점점 정규직 중심의 노동형태가 일반화되었던 경험을 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노동형태 속에서 이를 조직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찾아야 한다. 건설노동자들이 직고용과 같은 방식의 투쟁을 통해 조직되고 새로운 주체로 성장하고 있듯이, 산별노조마다 기존 임단협 중심의 활동만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일정정도의 기금을 만들고,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현재는 예전과 같이 학생운동 등을 통해 훈련된 활동가 층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새로운 노동운동 패러다임 속에서 신진 활동가를 육성하는 교육과 훈련 방식들이 함께 마련 되어야 한다.

### 4) 산별중앙, 총연맹의 강화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지난 민주노조 운동이 지향했던 산별노조 건설의 역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산별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각 기업의 이해와 노동조건을 넘어서 산업별 전체 자본을 상대로 한 교섭, 더 많은 조직화를 통한 투쟁의 극대화,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이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가 독자적인 전망과 자기 활동을 찾지 못하고, 각 기업과 현장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자 운동의 전체 발전방향을 찾지 못한 채 각개약진하고 있는 산별의 상황에서 각종 조직갈등들이 발생하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한편 노동자 운동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지향을 갖지 못할 경우, 산별이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파트너가 되거나, 단순히 노동자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역할만 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산별노조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각 지역본부들도 독자적인 위상이나 사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별과 지역본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민주노조 운동의 고민이다.

노동자 운동의 지향, 한국에 맞는 산별운동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찾는 과정에서 총연맹의 역할도 찾을 수 있다. 차별하고 장기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 5) 코로나 위기로 가속화될 체제의 위기, 노동자운동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지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경제 위기 시에도 자본주의가 지속될 것인가가 논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는 지속하고 있고, 위기에 적응하며 살아남고 있다. 이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노동형태나 통제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사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며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자본은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대면 노동이라 여겨왔던 교육, 의료 등의 영역에서도 비대면 방식의 노동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 형태의 노동 증가 등 전통적인 자본-노동의 계약 방식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이나 노동자들의 저항을 두려워하여 유예되고 있는, 노동자들을 덜 쓰는 새로운 기술들이 각 현장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본은 코로나19 위기를 자신들의 기회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시도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저항력이 약한 취약한 부분부터 전개될 것이다. 현재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이나 산업들은 이러한 위기가 자신들에게는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조합이 오히려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이고,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망각하는 것이다. 자본의 시도가 가져올 새로운 노동형태는 무엇인가? 어떠한 노동자들이 생겨날 것인가? 이러한 미래들을 고민하고 새로운 조직화와 활동방식을 만드는 고민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에서 경제위기 시기

# 민주노총, 무엇을 혁신 할 것인가

윤정일 |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드러난 민주노총의 총체적 부실

재난 시기, 위기에 내몰린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이 추진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또 다시 좌초되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구호로 외쳐온 ‘모든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이라는 사회적 위상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들만의 리그’라는 사회적 비난과 내부의 분란만 떠안게 되었다. 집행부의 리더십 부재, 의사결정 과정의 비민주성 등 몇몇 문제점들이 지적되긴 했지만 이번 사회적 대화 전 과정을 볼 때, 과연 민주노총이 한국사회 노동계급을 대표할 만한 자격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보다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

## 협상의 실력도, 절박함도 없는 민주노총

이번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정말로 해고를 금지시키는 것이었는지, 민주노총의 정치적 위상과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 정부의 재난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노동자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관철시키는 것인지, 얻고자 하는 것이 불명확하니 협상의 전술도 없다. 합의 가능한 지점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조직적 공감도 없었다. 단위노조 교섭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 누가 요구했는지 알 수 없는 요구안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5월 중순 무렵이었다. 공공운수노조를 예로 들자면,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해야 할 요구안이 무엇이어서 하는지에 대한 조직적 토론과 논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교섭은 조직의 응집력을 최대한 필요로 하는 노동조합 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대화 진행과정

그 어디에도 조직적 총의가 모아지는 과정이 없었으며 긴장감 또한 없었다. 조직력에 기반하지 않은 사회적 대화는 처음부터 한계를 안고 출발할 수 밖에 없었다.

## 합의 결과에 대한 토론은 없고 책임 공방만 남아

6월말, 7월초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민주노총 중집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최종 합의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토론은 상실된 채 합의안의 절차적 하자과 대의원대회 개최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처럼 무엇을 합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현장의 조합원과 대의원 대다수는 노사정 합의문 원문 보다 합의안 반대 성명서를 먼저 받아 보아야 했다. 민주노총이 코로나 시기에 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고민은 현장 조합원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못했고, 대의원들은 찬반 어디에 설 것인지를 강요받았다. 현장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면 노사정 합의 그 자체에 목매는 김명환 집행부나 부결을 주장하는 중앙집행위원이나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교섭을 진행하고, 결과를 함께 책임져야 할 다 같은 민주노총의 지도부로 보일 뿐이다. 결국, 상층 활동가들의 찬반논쟁과 합의안 부결, 위원장의 사퇴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민주노총의 총체적 난맥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변화에 직면한 것은 노동운동 진영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7월4일 노동자대회였다. 민주노총은 상반기 주요 투쟁 일정으로 7월4일 10만 노동자대회를 예정하고 있었고, 5월 6월 상반기 내내 주요 회의 때마다 투쟁점검을 안건으로 다루었다. 그 시점, 민주노총의 집회 참여 방침은 조합원들의 항의에 부딪혀 이미 현장에서는 실행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고 있었지만 회의 때 보고되는 몇몇 조직의 동원인원만 믿고 있던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한번도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 결국 집회는 며칠을 앞두고 취소되고 말았다. 그 동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은 수많은 혁신의 필요성에 직면해왔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정국은 우리 노동운동 진영이 이러한 혁신의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 민주노총은 뭐하는 조직입니까

이번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두고 현장의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물어 온 질문이다. 특히 근래에 급격히 늘어난 젊은세대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이 뭐하는 조직인지 정말로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87년과 97년 노개투를 거쳐 온 기성세대가 아닌 90년대 이후 세대에게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정체성도 없고 왜 민주노총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다. 사실 이 질문은 민주노총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민주노총은 자신의 역할을 실질적 사업과 성과로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저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이다”라는 과거식 답변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대표하여 국가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과 영향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코로나 위기라는 새로운 정국에서 민주노총이 해야 할 역할과 집중해야하는 의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기존의 방식으로 가능한가

한국의 노동운동은 기업별노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 진영은 87년 이래 산별노조 건설과 산별적 교섭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현실에서는 기업별 노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자신의 임금 극대화과 복지 개선에 집중한 기업별노조와 힘있는 대공장 노조의 동원력을 필요로 한 민주노총의 ‘담합’구조도 기업별노조 체제를 강화하는데 일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도 사실은 각 사업장이 자기 현안을 들고 파업의 시기를 집중한 것이었다. 물론, 민주노총의 이러한 투쟁이 한국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구조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노동조합 활동을 더욱 파편화시키고 있다. 당위적인 구호를 앞세워 조합원을 동원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 혁신에 관한 몇 가지 고민

총체적 난국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혁신을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이제, 그 동안 외부의 적을 향해 있었던 시선을 돌려 우리 내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 세대교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세력이 누구인가라는 문제다. 87년과 97년 노개투 시절을 거쳐 온 기성세대가 가장 실패한 지점은 노동운동을 이끌어 갈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현장권력을 재편해야 한다.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경험도 부족하고 이들이 가진 사고방식이 우려스럽겠지만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이들이 노동운동의 중심세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가령 민주노총 대의원 구성을 연령대별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87년과 97년 노개투 세대의 헌신과 노력으로 오늘날의 민주노총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노총이 봉착한 한계 또한 이들 세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 정파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김명환위원장이 정파를 직접적으로 거론함으로써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정파의 부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일종의 프레임전이었다. 사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정파가 문제라기보다 정파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민주노총을 움직이는 정파구조는 과거에 뿌리를 두고 명맥만 유지해오고 있을 뿐, 현재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자기 내용이 없다. 정파라고 할 수 없다. 가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향은 무엇인지, 노동운동의 연대전략은 무엇인지,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지, 민주노총의 혁신방안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 자기 주장을 펼치고 서로 논쟁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운동의 노선 없이 관계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은 정파가 아니라 패거리일 뿐이다. 공개적인 정책 토론을 통해 제대로 된 정파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 상상력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운동은 조금씩 성장해 왔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기존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힘은 '새로운 사회를 향한 상상력'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운동의 상상력은 사라지고 현재의 문제만 쫓아가는데 급급해지기 시작했다. 1년짜리 사업계획서는 넘쳐 나지만 10년의 전망을 담고 있는 사업보고서는 본적이 없다. 1년짜리 사업보고서에는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이 담길 수 없다. 정책역량을 개발하고 교육과 토론을 조직하는 현상이 사라

저가는 것도 이 대부분의 사업이 1년 안에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계획조차 하지 않는다. 운동의 성장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들을 요구하고 있다.

### 글을 마무리하며.

문제의식만 가득할 뿐 대안은 뚜렷하지 않다. 다만, 이렇게라도 끊임없이 문제를 던지고 논쟁을 촉발해야만 새로운 돌파구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소 거친 저의 문제제기가 동지들과의 토론을 통해 변화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2020 노동운동포럼 토론문

이원재 | 금속노조 기획실장

##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1) ‘해고금지’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의안을 폐기했다거나 민주노총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들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서술은 단정적

-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노조법 개악 등에 맞선 투쟁, 전태일 3법 쟁취투쟁, 사회연대전략 모색 등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민주노총의 주요사업 이었음.
- 원포인트 최종안 반대 구체적 이유는 금속노조 평가안 참조

### 금속노조 원포인트 최종안 평가(초안) 중

최종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해고금지”,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가 지도, 노력 등 추상적 수준에서 언급됨 ② 취약계층의 해고금지 및 보호는 선언적으로 표현되며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측만 신청가능하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 기간산업안정자금 지원시 해고금지와 연계가 없음 ③ 자본의 책임과 고통 분담 명시가 안되고, 휴업수당 감액 · 근로시간 단축 · 휴업 조건을 완화 등 노동자들(특히 집단적 저항이 불가능한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적극 협력한다고 명시 ④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를 ‘경사노위’로 명시하여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민주노총 방침 위반 ⑤ 코로나 재난 극복을 위한 수백조의 세금이 취약계층을 위해 얼마가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어야는지 점검할 후속논의 구조

(업종별/지역별 고용협약 혹은 협의회 구성)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음.

“간접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고용보장, 정부재정 지원시 ‘고용안정협약 체결’ 의무화, 모든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전면적용, 5인미만 사업장 휴업수당 보장 및 지원, 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생활방역체계를 위한 제도정비” 정도로 해당주체가 분명한 요구안으로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압축하고, 해당주체(간접고용, 특수고용, 정부지원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 의료사업장)들을 중심에 둔 다양한 사회적기획들을 조직해서 공세적인 쟁점화 사업을 전개하지 못한 점은 한계임. 결국 구체적인 요구가 정리되지 못하고, 교섭 및 투쟁 전술이 없던 민주노총 교섭단은 정부가 제시한 합의문 문구를 조율하는 방식이상으로 대응할 수 없었음.

## 2) 사회변혁에서, 노동자운동에서 진보정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노동자운동의 과제 중 진보정당의 역할에 대한 개념이 부재함.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든 국가 권력을 쟁취하려고 일상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조직은 정당뿐이다. 정당만이 아니라 노동조합도 사회 전체를 시야에 담으며 정치적 행위자로 나설 수 있고, 그게 바람직하다. 어렵더라도 노동조합 역시 그런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이런 과업을 맡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반면 정당은 처음부터 이런 역할이 본업이다. 노동자운동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전위’로 성장하려면, 노동조합운동 곁에 자본주의를 극복한 새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분명한 지향을 지닌 진보정당이 있어야 한다. 노동운동은 진보정당들이 이런 지향에 충실하길 끊임없이 요구하고 압박하며 이런 내용을 공동으로 실천해나가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이 아무리 생존과 발전을 위해 몸부림을 쳐도 탈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정당운동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는 늘 제 자리를 맴도는 시지포스의 노동이 될 따름이다.

## 3) 친민주당 실용주의를 저지하긴 위한 공동전선의 필요성

-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민주노조운동 내 민주당 세력의 영향력은 커져 왔으며 최근의 지방선거와 총선을 거치며 현장조합원들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기대 흐름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원포인트 최종안을 찬성했던 민주노총 대의원 38%의 상당수는 최종안의 내용에 대해 찬성했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지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어차피 투쟁은 안되는 것이니 정부나 보수정당과의 거래를 통해 실리라도 챙기자는 ‘실리주의 흐름(노사협조주의의 다른 이름)’도 상당수 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친 민주당 세력과 문재인 정부 지지 흐름’이 민주노조운동 내에 그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세력들이 규합된다면 이번 민주노총선거에서 ‘친 민주당 흐름과 실리주의 흐름’이 최대다수 세력이 될수도 있다. 이번 민주노총 3기 선거의 중요한 과제는 ‘친 민주당 실리주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제세력의 공동전선’일 수도 있다.

## 토론문

### 1) 동일노동 동일임금 산별임금체계개편 할 수 있다.

#### 산별임금체계와 산별협약

- 기업별 노조운동을 극복하고 계급내 격차해소를 위해 가는 길이 한방에 가능하지 않다. 최소한 10년 정도 단계별 로드맵을 상정해가면서 추진해나갈 일이다. 격차해소를 위해 금속노조는 산별임금체제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후상박임금체계’를 2018년 교섭에서 제기하였다. ‘하후상박’ 임금인상을 요구한 취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영세 사업장 임금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 현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추진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당장 하후상박 임금인상을 실현하기는 어렵더라도 ‘산별임금체계’를 만들어가는 것과 함께 몇 년에 걸쳐 상향평준화를 이루어가는 목표하에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하청업체 납품단가 인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후상박 임금인상을 관철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므로 ‘적정납품단가 보전방안 등 세부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과 최초계약 납품단가 보장, 업체별 납품계약 시 보장된 임률적용 여부 노사합동 조사 등 하후상박 임금인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과제다.

□ 임금 : 임금인상, 산별최저임금, 산별임금체계

0. 임금인상 : 전체가 정액 임금인상 중심으로 추진 → 이후 사업장별 추가인상

0. 최저임금 : 중앙교섭 산별최저임금+대정부요구 → 지부집단교섭 산별최저임금+지자체요구

0. 임금체계 : 금속노조 표준임금체계에 맞추어 중기적으로 단일호봉표 쟁취, 업종별로 비슷한

수당을 묶어 단계별로 점차 상향평준화

□ 단협 : 산별협약(모범안)의 단계별 상향평준화

- 0. 산별협약은 금속노조가 지향하는 사회상을 노동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며, 금속노조의 철학과 결의의 내용을 담는 것
- 0. 산별협약은 기업별 협약인 사업장단협에서 출발하는 동시에 금속노조가 추구하는 사회복지와 산업정책 내용을 담는 것
- 0. 산별협약(모범안)에 맞추어 사업장단협의 단계별 상향평준화
- 0. 현재 중앙협약·지부합의서 조항을 사업장단협에 담아가면서 협약적용을 확대
- 0 통일시켜온 사업장단협 내용을 산업 전체에 적용할 기본협약 및 임금·고용·노동과정의 3대 협약으로 제편, 협약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법·제도 개선

### **금속노조의 향후 운동방향**

금속노조는 2019년 임시대대를 통해 금속노조 발전을 위한 운동방향으로 1. 금속노조 운동을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하면서 II. 노조 안으로는 ‘지역지부 확대·강화를 주된 목표’로 제반 사업을 추진하며, 3. ‘신규 조합원을 초기업 차원으로 조직’하는 활동에 계획적으로 힘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의 기업지부의 교섭 및 사업에 대한 산별노조로서의 관장력이 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금속노조에서 지역지부와 기업지부의 조합원 비중을 보면 2014년 9월 기업지부의 비중이 59.7%, 지역지부의 비중이 34.3%였으나 2018년 기업지부의 비중이 56.1%, 지역지부의 비중이 39.9%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현대기아차 계열사 10개 사업장 조합원 90,383명의 조합원 중 26,378명의 조합원이 2025년까지 정년을 맞이하는데 이는 2018년말 기준으로 조합원의 30%에 해당한다. 기업지부의 신규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지역지부의 조직확대 속도가 이어진다면 5년 후에 부품사가 주력인 지역지부 조합원이 전체 금속노조 조합원의 60%가 될 전망이다.

### **2) 코로나 시대 총연맹과 산별의 요구는 무엇인가**

####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향해**

- 장기간 지속될 위기국면에서 피해가 계속 집중되고 있는 취약노동자를 대변하는 사업을 향

후 민주노총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해 실천해야 함. 우선해서는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 5인 미만 등 영세사업장 노동자 생계 보장, 전태일 3법 우선제정에 집중

## **사회적대화에 대한 재설계**

○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불발된 상황에서 대정부 교섭은 불가능해진 것인지, 중앙전선을 어떤 의제로 어떻게 압박해 어떤 형태의 교섭을 끌어낼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새로운 직선 집행부 선출을 계기로 조직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대화를 둘러싼 조건과 한계, 교섭 및 투쟁전술 등에 대한 총체적인식의 합의와 조직내 민주주의, 소통구조의 확보임.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판이 확보되지 않는 사회적대화는 조직내 분란만 조장할 가능성이 큼. 이런 조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전체 차원의 (2차 및 3차) 사회적 대화 전략과 실행계획을 재설계하여, 사회적 대화 추진 방식과 의제, 목표, 절차 등에 관해 조직적 논의와 합의를 도모해야 함.

## **업종별/지역별협의체(협약) 구성을 위한 노정협의**

○ 여전히 정부의 기간산업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집행과정에서 재벌과 기업에게만 엄청난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고용유지는 강제되지 않고 있음. 또한 원청사에게 하청업체(협력업체) 고용유지를 강제하지 않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음. 향후 급속한 산업변화와 구조조정 문제까지 고려할 때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무산에도 불구하고 업종별/지역별 고용협의체(협약)를 요구하고 강제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 총연맹 차원에서는 취약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사업을 전개하면서, 재난대응책의 구체적 집행을 논의하고 고용을 강제하기 위한 ‘업종별/지역별 협의체 구성’ 요구를 향후 주요한 노정협의의 과제로 제기해야 한다.

## **사회연대전략 구축과 사회-정치세력화**

○ 민주노조운동이 사회연대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간접고용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미조직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작은사업장 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를 운동의

주체로 세워내고 산별노조를 매개로 기존의 노동조합운동과 결합시켜야 한다. 또한 재벌을 정점으로 한 수직계열구조에서 소외되고 수탈당하고 있는 중소 영세상공인, 일상적 차별을 겪고 있는 소수자 운동들과의 사회적 연대도 확대해야 한다.

## 장기 저성장 시대, 내부 격차 축소와 고용유지 전략 마련

○ 총연맹과 산별노조(연맹) 차원에서 일자리 나누기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재벌 대기업, 수출 중심의 한국사회 경제구조에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주 배당 최소화, 임원 인건비 상한선 제한 등을 통해 재벌이 보유한 막대한 사내유보금 중 일정한 재투자 비용을 제외하고 고용 창출, 하청업체 고용유지와 적정 임금을 위해 사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주기적 감염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 질병관리 전문인력 및 보건 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자리 나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체계 정비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동시간 단축은 시간당 임금과 비례한 일정한 임금축소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들의 지출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교육, 의료, 주택(부동산)과 4대 보험제도 강화 등 제도적인 조치를 강제하고 내부적 토론과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 위기, 산업변화 과정에서 이직, 전직, 직업훈련 등 일자리 이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 개편 및 세금인상도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총연맹과 산별노조(연맹) 차원에서 대안과 요구를 마련하고 조합원 내부의 토론과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 금속노조의 2021년 산별교섭 의제

### 1)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 저탄소 경제와 탄소 중립적 녹색 사회로 가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노동조합이 앞장서 추진. 기후위기 책임이 기업과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할 것과 전환의 주체가 노동자·시민임을 자임하는 것이 중요, 산업전환으로 쇠퇴하는 산업의 노동자·취약계층 보호, 산업전환으로 약화 되는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지자체별 재생정책 및 에너지정책 등이 중요하게 제기 되는 상황, 이에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초점
- 노조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사회적 의제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간부·조합원 교육을 일상화하고 사업장에 맞는 탈탄소화 요구 및 지역사회에 맞춘 에너지불평등 해소방안 등의

의제 개발은 물론이고, 교육·선전·정책·조직 등 각개 사업 추진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노조 내 책임 단위를 분명히 세워 지역캠페인·시민선전전 등 사회적 행동과 대정부·지자체 교섭·투쟁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

## 2) 산업재편 대응 고용안정협약 및 업종별 협의체 구성 요구

- 당면목표는 ‘산별노조와 함께하는 산업전환’의 내용과 틀을 갖추는 것,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원·하청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 목표를 위해 금속노조가 미래산업으로 가는 상과 경로(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전면투쟁을 통해 산업재편 대응 고용안정협약을 쟁취

# 총연맹의

##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류미경 | 민주노총 국제국장

###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실패를 통해 드러난 총연맹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공동 인식의 부재

민주노총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대화는 실패했다. 최종안은 온라인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고, 이를 추진한 집행부는 사퇴했다.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고용·생계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입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변하겠다고 나섰지만, 교섭의 목표와 구체적 요구 마련, 이에 대한 조직 내외부의 동의와 지지 형성, 이를 관철시킬 교섭 전략의 수립,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에 관한 민주노총 내부, 특히 의결 기구에서의 논쟁은 심각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결과를 놓고 조직적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갈등이 격렬하게 표출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정세 인식과 민주노총의 대응 목표는 무엇이어서 하는지, 총연맹 집행부가 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직적 합의가 매우 취약하거나 아예 부재하다는 점이었다.

발제문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금격차 확대로 귀결된 기업별 노조 중심의 전투적 경제주의를 극복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이행과정으로서 연대임금·연대고용 전략을 전면화할 것,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치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와 차별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체제에 도전하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 과제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총노동의 대표체로서 총연맹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논의의 출발점을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실패를 통해 드러난 민주노총의 현재 상황 진단으로부터 찾아보고자 한다.

## 민주노총의 이념과 전략에 대한 합의된 인식?

발제문에서 언급한대로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는 민주노총은 출범초기부터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에 따라 한국경제도 급격하게 변모한 시기와 함께 해왔다.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계급 대표성과 정세 개입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모색은 출범 초기부터의 항상적인 과제였다. 역대 집행부는 민주노조운동 혁신이라는 화두로 논의를 제기했는데, 2000년 노동운동 발전전략위원회, 2005년 조직혁신위원회, 2009년 노동운동 혁신위원회, 2014년 미래전략위원회, 2015년 민주노조운동 발전전략위원회가 이러한 논의를 추동하기 위한 기구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 총괄 평가, 이념과 노선 정립, 산별노조건설 등 조직발전전망, 민중연대·국제연대 방침 등의 수립을 목표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워크숍과 토론회, 전국순회토론회를 약 1년 여 간의 기간 동안 진행하여 마련된 2000년 노동운동 발전전략위원회의 보고서는 일부 활동가들의 보이콧, 조직적인 논란과 갈등으로 대의원대회에 보고도 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2005년 조직혁신위원회는 산별노조 건설 추진, 임원 선출, 재정 자립과 안전성 확보 등 집행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전개되었으나 위원회를 책임지던 수석부위원장의 구속과 집행부 사퇴로 역시 중도반단되었다. 이후 논의들도 대의원대회에 그 결과가 보고되고 심의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된 적이 없었다. 민주노총의 노선 정립과 발전 전략 수립이 전조직적 논의와 공식 의결 기구를 통한 채택이라는 과정이 지속적인 실패를 거듭한 채 집행부 선거에 출마한 세력들이 자신의 지향을 제출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원 (이후에는 조합원)들이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으로 이를 대체해왔다.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사회적 파트너십 참여', '산별노조-진보정당 강화' '사회연대전략', '총파업·총궐기' 등 역대 집행부가 표방한 노선은 해당 집행부 임기동안 추진될 사업의 좌표를 제시할 뿐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총연맹 집행부의 지도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 공식 의결기구의 논의력과 의사결정 관행

민주노총 내에서 상이한 노선을 추구하는 복수의 정파가 공존하고 경합하며 활동한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입장의 차이를 조율하고 합의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부재한 가운데 민주노총

의 공식적인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은 때면 격렬한 갈등을 동반한다. 대의원대회는 어떤 안을 가결시키고 실천 의지를 모아야 할 때보다 부결시켜야 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집중된다. 이견과 갈등의 요소가 있는 방침이 제안되었을 경우 수정 혹은 이견 조율의 과정을 거쳐 공동으로 결정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을 좌초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지 않고도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민주노총 전체 구조 속에서 총연맹에 할당된 권한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각국 노동조합 총연맹이 지니는 위상과 권한은 각기 다른데, 총연맹의 위상과 권한이 강할수록 총연맹의 노선과 전략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데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산별노조와 지역조직, 단위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총연맹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한 영국노총의 경우 연 1회 (3일간) 개최되는 대의원대회는 중앙 집행기구가 안을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는 구조가 아니라 가맹 노조들이 제출한 수많은 결의문들을 심의하여 통과된 안을 가맹조직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의제로 삼는 구조다. 총연맹 중심성이 강한 유럽의 여러 노총들의 대의원대회는 사업계획의 채택보다는 전체 조합원이 공동의 정세인식을 확보하고 중기적 노선과 방침을 채택하는 과정으로 이에 대한 초안 작성에서부터 단위노조 조합원 총회-각급 조직 대의원대회를 통한 의사 확인과 이견 조율을 거쳐 총연맹 대의원 대회에서의 최종 채택까지 약 10개월을 소요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결정을 하는 것’보다 ‘결정을 안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오히려 2안을 제출하고 이를 가결시키는 데 힘을 쏟는다).

## 민주노총은 총연맹의 교섭전략을 필요로 하는가

발제문이 지적하는 총연맹의 역할부재는 민주노총의 역대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총연맹의 교섭전략 변화 추이를 살펴보다도 확인된다. 1995년 출범 당시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통일한다”고 강령을 통해 표방했다. 1996년~98년에는 중앙교섭을 중심에 두고 산별·기업별 교섭을 연계하고 총력투쟁을 조직한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산별연맹으로 교섭권·쟁의권을 위임하고 임금인상의 경우 민주노총이 제안한 임금인상률, 임금격차 축소, 통상수당의 기본급 전환을 요구하고 대기업 노조에게는 낮

은 임금인상 대신 하청의 계약조건·임금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었다. 1999년~2004년까지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산별교섭 제도화와 사안별 (구조조정, 정리해고, 연봉제도입 등) 노정·노사정 교섭을 추진했다. 이 시기부터 임금 요구로는 격차 축소를 위한 비정규직-정규직 차등인상과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50% 수준으로 상향을 제시한다. 이후에는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산별 임단협 투쟁과 시기집중, 2015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 공적연감강화, 노동법개정, 정치파업 및 임단투 쟁의권 집중 등 사업장의 조건과 처지에 맞춰 투쟁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 제출된다. 2018년에는 중층적 교섭구조 확립 (노정/노사정/산별·업종별/지역별)을 교섭 전략(?)으로 제출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총연맹이 총노동의 임금교섭을 관장하여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노동표준을 확립하려는 시도는 약화되고 산별교섭의 제도화와 임단협 투쟁 시기집중에 치중한다. 민주노총은 매년 △임금요구안 (실태생계비 조사에 따른 인상률 요구안-정규직/비정규직 차등 요율로 제시+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 법제도 개선 과제 △ 단협 요구안(모델 기업별 단협 요구안)으로 구성되는 ‘요구와 과제’를 발간한다. 그러나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논란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교섭에 있어서 총연맹의 권한과 위상은 모호한 상태에서 요구와 과제의 용도 역시 불분명하다. 총연맹 사무총국 운영에서 나타나는 정책역량에 대한 과소투자와 조직·쟁의사업으로의 집중도 이러한 현상의 이면이다.

## 민주노총의 노선과 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논쟁의 기획이 재개되어야 한다

발제문은 체제에 도전하는 노동운동으로 민주노총을 혁신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정치적, 경제적 지향을 조직적으로 공론화하고 연대임금 연대고용 전략을 전면화하고 총연맹의 정책, 교육 역량을 새롭게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민주노총 운동 전체에서 총연맹이 차지하는 권한과 위상, 역할에 대한 대대적인 논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25년의 결과물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총연맹 강화의 필요성을 정세 인식 속에서 확인해야 한다. 논쟁의 결과를 대의원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전 조직이 능동적으로 함께 실천하는 방침으로 전면화해야 한다. 총연맹 중심성은 총연맹의 존재로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다. 2019년 이탈리아 제1노총 (CGIL)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문제의식을 참고하자.

“통합성, 포용성, 민주적 참여는 우리가 개인주의, 탈매개화(dis-intermediation :노조라는 매개를 통해 대표성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직접정치를 선동하는 포퓰리즘) 노동조건과 이해의 파편화의 패러다임에 맞서기 위한 도구이며,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생산시스템과 사회의 급속하고 강렬한 전환은 노력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식의 일련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교섭을 완전히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대표성을 측정하는 특정한 방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총연맹중심적인 노사관계 관행을 강화하고 새로운 집단적 연대를 재구축해야 하며 이는 “포용적 교섭”을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

시민과 제도, 기업과 개별노동자의 직접적인 관계에 기초한 사회라는 아이디어는 최근 대표조직의 역할을 공격하고 연대망과 전반적인 보호를 제거했다. 불안정노동 특히 청년세대가 겪는 노동조건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단체행동에 대한 공포와 불신의 기운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며 이는 노동 세계의 필요한 재통일의 조건이자 가치로서, 작업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단결과 민주적 통합을 위한 총연맹의 역할을 의문시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 사회정책이 필요하고 총연맹의 새로운 대응 방식이 필요. 노동권리현장 운동 과정에서 특별한 대대적인 조합원 토론, 서명운동은 총연맹의 정체성과 조합원으로서의 소속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